



주간통일정세 2009-22(2009.05.25~05.3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2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북 남흥청년화학 시찰(5/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표적인 종합화학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북 안주시)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그는 기업소에서 2008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석탄 가스화공정을 둘러본 후 “기업소 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가스화 공정 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어 비료생산을 시작하는 것”이며 “농업생산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인 비료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스화공사에 총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걸린 문제를 몸소 해결”해주었다고 통신은 보도
-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들인 박남기, 장성택이 동행

● 北 권력기관들, 김정은 총성경쟁 가속(5/31, 연합)

- 북한 군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정운의 후계구도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등 북한 핵심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정운에 대한 ‘총성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운이 지난 1월 김 위원장의 ‘교시’에 따라 후계자로 내정된 후 북한 군부는 정운의 후견인이자 김 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의 지휘아래 정운의 후계구도 구축을 주도, 정운은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개최 수일전 국방위원회의 말단인 지도원이라는 직책을 부여 받음.
- 정운은 특히 핵심 공안기관인 보위부 장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위부 간부들은 정운에 대한 총성 경쟁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1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정운은 5월 초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 만경대구역 룡악산 인근의 보위부대학 시찰 때 우 부부장 등과 함께 수행, 또 보위부 간부들은 산하 연락소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마약불법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거액의 자금을 정운에게 직접 상납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보위부 연락소 마약상들이 중국 단동의 공안에 연행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노동당도 총성경쟁에 뛰어들어, 조직지도부의 지휘아래 일부 당세



포들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후계자를 하루빨리 정해달라는 청원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문예부문에서는 정운을 찬양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의 노래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노래는 후계자 정운에 대한 첫 찬양가요로 북한 최고의 작곡가라는 보천보전자악단의 이종오가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국방위원장 셋째 아들 별명은 젊은 대장(5/28, 마이니치신문; 한국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정운(26)에게 ‘젊은 대장’이라는 칭호가 붙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올해 들어 김정운을 지칭해 ‘젊은 대장’이라는 애칭을 자주 쓰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젊은 대장 좋아 좋아”, “젊은 대장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젊은 대장에게서 이제 관록이 나온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함. 북한 소식통은 “‘젊은 대장’은 김 위원장이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삼남의 애칭”이라며 “후계체제가 ‘젊은 대장’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
- 김정운은 자신의 형인 김정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철은 노동당의 업무를, 정운은 국방위원회 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함.

나. 정치 관련

● **북한 전역서 핵실험성공 축하 군중대회 개최(5/3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군중대회가 평안남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도 소재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0일 보도, 평남도에서는 안국태 인민위원장, 자강도에서는 박도춘 당 책임비서, 황남도에서는 김락희 책임비서, 황북도에서는 최룡해 책임비서, 강원도에서 리철봉 책임비서 등이 각각 참석

● **조평통, 북핵 韓·日 공조 비난(5/29, 조평통 서기국은 보도;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남한 정부가 북한 핵문제 대응에서 일본과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매국배족 행위”라면서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 서기국은 ‘보도’를 통해 일본을 방문한 한승수 총리가 5월 22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북핵문제 대응에 공조기로 한 사실 등을 거론,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과 공모하여 동족대결을 일삼는 천추에 용납못할 친일사대 매국행위”라고 비난



● 유엔시, 정전협정 유효…구속력 있어(5/28, 유엔사령부)

- 유엔군사령부는 28일 “정전협정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서명 당사국들에 현재도 유효하며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밝힘. 유엔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이 27일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이 (해상)봉쇄를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협정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사는 이어 “정전협정은 지난 55년간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며, 지역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평가

● 北, 中 접경지역 통제 대폭 강화(5/28, 연합뉴스)

- 28일 대북 소식통 및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접경지역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 시작, 25일 2차 핵 실험을 전후해 통제를 더욱 강화
- 이로 인해 인편을 통한 북한 송금길이 막혀 북·중 무역이 위축되고 있으며 탈북을 위해 접경지역 군인들에게 건네는 ‘탈북비’도 크게 올랐다고 함.
- 탈북자나 한국의 친지들이 은밀하게 보내는 송금은 더더욱 어려워져 20%의 수수료를 건네는데도 돈을 전달해주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 일대 접경지역에는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감시 카메라 수십 대가 북한 측에 의해 새로 설치

● 北, 2차핵실험 성공 평양서 경축 대회 개최(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6일 평양체육관에서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실험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대회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서기장 등이 참석
- 최태복 비서는 연설에서 “이번 핵실험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이 더욱 심해지는 조건에서 공화국의 최고 이익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일대 장거”라고 주장
- 행사에는 인민군, 과학자, 노동계급, 농업근로자 대표 등도 나서 연설을 했으며, 이들은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거세차게 일으킴으로써 2012년에 강성대국을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北, 정전협정 끝…군사적 타격하겠다(5/27,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아 넣었다”며 “우리 선박에 대한 단속·검색 행위를 포함해 어떤 사소한 적대 행위도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성명에서 “전시(戰時)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져버리면서(내버리면서) 괴뢰(남한)들을 PSI에 끌어들이는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성명은 이어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남한) 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으로 조선반도는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며 우리(북) 혁명 무력은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

- **北조평통, 전시 상응 실제행동으로 대응(5/2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은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참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선전포고를 해왔다”고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성명은 “우리의 선박을 감히 정선시키거나 단속, 검색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성한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어디에서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

- **北, 수십년동안 제재속에 살고 있다(5/27,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27일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발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대조선 제재 정책은 썩은 닭알(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호언
 - 신문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정책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며 “미국은 우리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해서 수십년 전부터 경제제재와 봉쇄정책을 실시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고 맹비난, 신문은 “우리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를 문제해결의 전제



● **노동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 1면에 게재 (5/25,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25일 발행된 신문 1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을 실음. 신문은 또 5면에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아침 “(노동)신문은 김정일 동지께서 남조선 전 대통령 노무현의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조전을 실었다”며 “신문은 5면에 전 남조선 대통령이 사망한 소식을 주었다”고 설명

다. 경제 관련

● **北핵실험에도 EU 지원사업 예정대로 진행 중(5/30,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의 대북 지원사업 실무진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25일 방북, 6월 9일까지 2주일간 일정으로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EU위원회의 크리스티안 호만 공보관은 “유럽지원협력기구에 소속된 실무진의 이번 방북은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식량안보 사업을 매년 한차례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례적 활동”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통보는 실무진이 방북한 이후에 받았다”고 언급,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EU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방북중인 실무진의 활동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 그러나 EU위원회에서 대북지원을 담당하는 실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당장은 EU의 대북지원에 변화가 없겠지만 앞으로 위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며 “EU가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 반대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EU와 북한간 정치적 환경이 대북 지원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소개
- RFA는 “EU의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에서 인도적 식량안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럽의 비정부 기구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민간차원의 기부금이 줄고 사업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고 소개
- EU는 대북 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모두 3천 500만유로(약 4천200만달러)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올해 할당된 지원금은 900만유로(약 1천만달러)임.

● **北핵실험에도 외국인 북한관광은 예정대로 진행(5/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6월로 예정된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관련 관광업체들이 밝힘. 스웨덴에서 북한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는 6월 2일



유럽인 수십명으로 구성된 관광단이 6박7일 일정으로 북한관광에 나선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北, 시장서 음식판매 금지(제 280호, 오늘의 북한소식; 5/26, 좋은벗들)**
 -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5월 8일부터 북한 전역의 장마당(시장)에서 음식 판매를 금지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6일 주장
 - 소식지는 “판매금지 물품에 음식이 추가됨에 따라 시장마다 상인들과 단속원 사이의 실랑이가 여느 때보다 더 자주 목격된다”며 “단속원들은 금지 상품을 회수하는 한편 최소 3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설명
 - 소식지는 또 “국수 장사꾼들이 시장을 떠나 시골을 누비고 있다”며 “시장 매대에서 판매하던 장사꾼들은 장사가 잘 안되는 데다 당국의 잦은 단속을 피해 농촌 마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소개, 농촌에선 “농장원들이 옥수수가 있어도 전기가 없어 국수를 못만들기 때문에 시장보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소개

- **北, 개성공단 개발의지 불변(5/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개성공업지구의 기초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이라는 기사에서 남한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지만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키려는 것은 북측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남측이 “대결”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남한 정부의 “적대행위”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가동돼온 것은 “북측의 변함없는 개발의지의 표시이며 그 증거물”이라며 북한은 “당국 대화가 차단된 속에서도 남측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재협상의 마당을 마련하는 등 노력과 성의를 기울였다”고 주장
 - 신문은 “다만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그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이제는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고 말하고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중앙특구개발총국 통지문의 구절은 거꾸로 보면 6.15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

라. 군사 관련

- **北, 한미, 5월 200여회 공중정탐 주장(5/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국군과 미군이 이달에 200여 차례의 “공중정탐 행위”를 했다고 주장, 통신은 국군과 미군이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집중투입”해 국군은 90여 차례, 미군은 110여 차례 대북 공중정찰을 했다고 언급, 북한은 4월



엔 170여 차례에 이른다고 주장했었음.

● **정보당국자, 北 ICBM 확실한 듯(5/30, 연합)**

-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30일 알려짐. 정보담당 핵심 당국자는 “최근 북한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 연구소에서 화물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일 1기가 실려있는 것이 포착됐다”면서 “ICBM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측이 서둘러 발사 거치대를 설치할 경우 준비를 마치는 데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 **北, 동해서 신형 미사일 발사(5/30, 조선일보)**

- 북한이 29일에도 동해상으로 신형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한 발을 발사,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29일 오후 6시12분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동해상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
-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 100~160km의 북한 독자 개발 신형 미사일 이거나 최대 사정거리가 250여km인 구소련제 SA-5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언

● **北, 中 29분·美 24분전 핵실험 통보(5/27, 연합)**

- 북한은 25일 핵실험을 하기 직전 중국에는 29분전, 미국에는 24분전에 핵실험 가능성을 각각 통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짐.
-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9시 54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하기 전 중국에는 오전 9시 25분께 통보했고, 미국에는 오전 9시 30분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정보당국자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은 핵실험을 불과 30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라며 “특히 북한이 전달한 내용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었던 만큼 미국과 중국이 짧은 시간 이 정도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곧바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는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

● **북, 동해서 단거리 미사일 추가발사(5/27, 연합)**

- 북한이 26일 밤 동해안에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음.
-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26일 밤 9시10분께 동해상에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정보당국에서 상황을 면밀히 파악중”이라고 언급



- 이와 관련,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신상리의 포병부대에서 지대함 미사일 1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은 어제 그곳에서 지대함 2발을 발사한 바 있다”고 밝힘.
- 또 정부 관계자는 “당초 25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당일 낮 12시 8분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준비만 하고 실제 발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25일 2발, 26일 3발이 발사된 것”이라고 설명
- 이 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재처리 시설의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이 재가동을 준비중이란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면서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인 크립톤 가스의 탐지 여부는 며칠 걸려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北, 무수단리서 단거리미사일 발사(5/25,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낮 12시8분께 무수단리에서 단거리 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징후를 포착, 한·미 정보당국간 정밀 분석을 통해 발사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힘. 군 관계자는 “우리 군 C4I(지휘통신) 장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고신호가 포착됐다”면서 “이후 정밀분석을 거쳐 발사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언

● 北, 2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위력 강화(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5일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이 보도
- 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
- 통신은 “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며 “핵실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통신은 “이번 핵실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덧붙임.

마. 사회·문화 관련

● 北에 장애인 예술체육훈련센터 개소(5/30, 조선신보)

- 북한이 장애인들에게 예술과 체육을 가르치는 ‘대동강장애자문화센터’가 5월 초에 문을 열었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평양시 대동



강구역 문흥동에 있는 이 센터엔 북한 전역의 특수학교 예술소조학생들이 3개월에 한번씩 방문해 자신들의 기량을 평가받고 전문기량을 훈련, 이 센터에서는 성악과 무용, 기악, 탁구 등을 가르치며, 이를 위해 각종 악기와 음향설비, 탁구 기자재 등도 갖췄다. 앞으로 활쏘기와 사격, 역도 등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도 갖춰나갈 계획, 또한 한증탕도 설치돼 있으며 교육 뿐 아니라 강습과 토론회 등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모임도 열 예정

- 조선신보는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 관계자가 “해외동포 단체인 재미등대복지회와 스위스 외무성 개발협조국 평양협조사무소 등의 협력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혀 이들 단체와 기구의 지원 사실을 공개

● 北, ‘풋살’ 소학교 전국체육대회 종목 채택(5/28, 조선신보)

- 북한이 미니축구인 ‘풋살’을 전국 소학교 체육학급경기 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 조선신보는 28일 “오는 9월 진행되는 제3차 전국소학교체육학급경기대회의 각 도별 선발경기가 한창”이라며 “올해부터는 소학교체육경기에도 풋살이 새 종목으로 도입돼 예선경기 단계에서 학생, 교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제재 관련

● 안보리 제재논의 담보…내주 초 윤곽 나올 듯(5/30, 연합뉴스)

-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새로운 제재 조치 부과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의견 차이로 빠른 진전을 거두지 못함. 이에 따라 안보리 주요국이 조율한 제재 결의 초안의 윤곽은 다음 주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임.
-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과 일본 및 한국은 29일(현지시간) 대사급 회의는 갖지 않은 채 실무급 회의를 가짐. 그러나 유엔의 한 외교관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각국이 본국과 협의를 해야하는 관계로 일단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 초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
- 현재 안보리 주요국은 미·일이 내놓은 안 중 북핵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2006년 10월 북핵 실험 직후 채택했던 1718호의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새로운 제재 조치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논의 중인 새로운 제재 조치에는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여행 제한 대상 북한 인사 지정 및 항



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 모든 무기로 금수품목 확대 방안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전해짐.

-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어 비군사적 대응조치로 한정된 41조를 명시했지만 미·일의 이번 안은 41조를 명시한 것을 뺐으로써 무력사 용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임.

● 美대표단, 한중일러 파견(5/30, 연합)

-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표단을 한·중·일·러 등 6자회담 참가국에 파견할 것으로 28일(현지시각) 알려 짐.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정부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을 방문해 (북핵 실험과 관련한) 대응옵션과 접근방법을 해당 국가들과 직접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켈리 대변인은 합동 대표단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재무부의 관계당국자들이 포함된다고 밝힘.

● 차기 안보리의장국 터키, 대북결의 도출 협력(5/29, 연합)

- 일본과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터키 정부는 안보 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일 본 외무성이 29일 밝힘. 터키 정부 역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 위 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안보리, 北 해외 금융계좌 동결 검토(5/29, 연합)

-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 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이번 사태 발생 후 3차 회의를 소집해 북한 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 등 대북 제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P5+2 회의는 지난 26일 2차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될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한 뒤, 미·일이 중심이 돼 1차 초안을 마련
-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초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에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밝힘. 또한 기존 결의안의 제재 내용을 강 화해 금수 무기 품목을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하 는 방안도 포함
- 특히 초안에는 북한의 해외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여행 제한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유엔 안보리 25일 소집(5/25,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오후 8시 (GMT, 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러시아 언론들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인용해 전언
-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도 24일 밤(뉴욕 현지시간) 성명을 발표, 안보리가 25일 오후 긴급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北역류 美 여기자들, 가족과 통화(5/31,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이 역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이 지난 26일 미국의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
- 여기자들은 또 4월 15일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외교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직접작성한 편지를 전달했으며, 이 편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졌다고 VOA는 보도, 편지에서 두 여기자는 “감옥이 아닌 곳에서 힘들지 않게 지내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보낸 의약품 등을 잘 전달받았으며, 식사를 잘하고 있고 식사 후에는 건물 밖으로 나가 바깥 공기를 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소개

● 美관리, 南 핵보유론에 美목표는 한반도 비핵화(5/3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한국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기되는 핵보유론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윌리엄 토비 전 미 핵안보국 부국장도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수”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다”고 언급

● 美국방장관, 北 핵보유국 인정 불가(5/30. 연합)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북한이 핵확산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
-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우리의 우방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핵 등 여러가지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의 행위는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한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게이츠 장관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빈곤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자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에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북한은 점점 고립되고 있으며 주민은 굶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과 관련한)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가 그것”이라고 강조

● **美상원, 6월 9, 10일께 북한 청문회 개최(5/3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 북핵 6자회담의 미래 등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6월 9, 10일 북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제111회 회기 들어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지켜본다는 이유로 북한관련 청문회를 미뤄왔기 때문에 외교위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여에 본격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고 방송은 보도

● **美국무부, 北 도발행위 중단해야(5/30, 연합뉴스)**

- 이안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에 대해 “북한은 호전적인 수사와 함께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 켈리 대변인은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힘.
-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일깨워 주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의 행동에 상응한 결과가 따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美, 북 핵실험 여부 결론 못내려(5/30, 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이 주장한 핵실험 실시 및 성공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초기 분석 결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핵장치를 폭발시켰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고 언급

● **美육참총장, 필요하면 北과 싸울 수도(5/29, 연합뉴스)**

-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도 필요하다면 북한과 재래식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조지 케이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28일 밝힘.



- 그는 이어 현재 대테러전을 수행 중인 미 육군을 재래식 전투태세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군이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9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 백악관, 대북 금융제재 논의 확인(5/29, 연합)

- 미국 백악관은 28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항공기, 선박 운항 제한 등을 추진중임을 밝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은행거래를 중단시킬 것 같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지난 며칠간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은행과 항구와 관련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 기브스 대변인은 “중국이 그런 논의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그들의 대응은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
- 기브스 대변인은 또 최근 북한의 위협과 한미연합사의 감시 강화 조치 등과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에 상당히 오랫동안 명백히 관여하며 상황들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우리는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 간에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허세와 위협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끌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지적

● 존스 美안보보좌관, 北 핵무기화 갈길 멀어(5/28, 연합)

-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고, 이를 운반할 수단을 갖기에는 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 밝힘.
- 존스 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그것 자체로는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다”면서 대신 “임박한 위협은 이런 기술을 다른 국가나 테러조직과 같은 곳에 확산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가장 절박한 위협”이라고 언급
- 그는 핵을 무기화하고 운반수단을 북한이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는 막을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거론하면서 “특히 중국이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언

● 美, 北 대가 치르고 고립심화 경고(5/28, 연합)

- 미국 행정부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및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클린턴 장관은 27일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의 약속을 파기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런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북한의 협상태이블 복귀를 촉구,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혀 핵우산 제공방침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

● 백악관, 北, 위협통해 관심 못얻어(5/28, 연합)

- 미국 백악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위협과 성가심을 통해 주목을 받으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결코 위협을 통해서도 자신이 ‘갈망’하는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위협에 대해 “단지 자신들의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 기브스 대변인은 또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무력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 “그들이 정전협정의 무효를 시도한 것이 대략 지난 15년간 이번이 다섯번째”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 美재무부, 추가 對北 금융제재 검토(5/26, 로이터통신)

- 26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제한돼 있지만, 이같이 제한된 접근 수단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미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방안(옵션)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 오바마, 北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언급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북한은 직접적이고 무모하게(recklessly)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어 “이런 행동들은 모든 국가의 중대한 근심”이라고 지적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해 왔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향후 유엔 및 6자회담 참가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침을 밝힘.



다. 북·중 관계

● 中, 전인대 부위원장 방북 취소(5/29, 연합)

- 중국은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불만의 표시로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부위원장의 북한 방문을 취소, 전인대 내 북한통인 천즈리 부위원장은 당초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오는 6월1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했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이 29일 밝혔다.
- 천즈리 부위원장의 방북 취소는 중국이 지난 25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경한 내용의 외교부 성명을 내고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면서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한 지 4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중국 측의 불만과 불쾌감의 정도를 나타냄.

● 시진핑, 北 상황악화 중지 요구(5/27, 연합)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
- 시 부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중인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의 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회동에 참가한 소식통들이 밝힘.
- 시 부주석은 “북한의 핵 실험은 이런 중국의 원칙과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중국은 많은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견결하게(강하게)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

● 中 상하이·북한 민간여행 예정대로 시행(5/26, 신문신보)

- 북한의 핵실험에도 중국 상하이와 북한의 첫 민간 여행이 예정대로 진행, 신문신보(新聞晨報)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금려 여행사는 북한의 지하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여행객이 없어 예정대로 27일부터 상하이와 북한간의 첫 민간인 관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 그러나 북한 여행객들은 휴대전화기와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망원경 등을 휴대할 수 없음.
- 북한 관광은 판문점과 남북군사분계선, 3.8선, 평양지하철, 천리마 동상 등을 관람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8~9월에는 ‘아리랑’ 관람도 가능하고 가을에는 금강산 관광도 포함됨.



● 中, 냉정대처 필요...北 비핵화해야(5/25, 연합)

- 중국은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또 이번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측의 이같은 입장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 이후 알려짐.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북한 대사 소환해 유감 표명(5/27, 러시아 외무부)

- 러시아 외무부는 27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핵실험 실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사 소환 사실을 전하면서 김 대사에게 역내 안보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에 북한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핵실험 발사 당일인 25일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러시아는 이번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시
-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는 비난 성명에 이어 26일에는 28~29일 평양에서 예정된 북한과의 정부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위원회 무기 연기를 발표하는 등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 우려 표명(5/25,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 정부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 핵실험 소식은 우려를 낳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며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정보를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마. 북·일 관계

● 北, 日의 대북 공격론에 日 전 영토 타격권 주장(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장송곡을 불러오는 무모한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기지 공격론’에 대해 “재침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재침 전쟁을 일으킨다면 천백배의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만단의 군사적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



- **브라질, 北주재 대사관 업무 개시 연기(5/25, EFE 통신)**
 - 브라질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초 5월 말로 예정된 평양 주재 대사관의 공식업무 개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EFE 통신이 25일 보도,
 - 한편 브라질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브라질은 북한의 핵실험을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힘. 이어 “브라질 정부는 북한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신속하게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

- **이란, 北과의 핵.미사일 협력관계 없다(5/25, 연합뉴스)**
 - 북한이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25일 이란은 핵 또는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어떤 협력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의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핵 또는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북한과 어떤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확산, 이용에 반대한다”고 강조

3. 대남정세

- **PSI가입에도 남북 해사당국통신 정상진행(5/29, 통일부)**
 -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 이후에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 해사당국간 소통 및 선박 운항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통일부가 29일 발표,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북측이 해사통신망을 통해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신규운항 허가를 신청하는 등 남북해사당국간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PSI전면 참여 등에 대한 비난을 계속 하면서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는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밝힘.
 - 이 부대변인은 또 북한 핵실험(25일) 이후 민간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지만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 반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5개의 인도지원단체가 북한으로 생필품을 반출할 예정”이라며 “인도지원 물자에 대한 반출은 계속 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

- **대북 인도사업 기금지원 보류될 듯(5/27, 연합뉴스)**
 -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가 매년 해오던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27일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핵실험을 계기로 악화된 대북 여론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라고 언급

● **정부, 개성·금강산 신변안전지침 마련(5/26, 통일부)**

- 정부는 26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남북관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 ‘북측 인원과와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할 것’ 등을 포함한 체류인원 신변안전관리지침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보냈다고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침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금강산 관광사업소를 중심으로 현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정부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소개
- 이 부대변인은 이어 “(지침에는) 개성과 금강산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북한 측 인원과와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반드시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언행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또한 현지에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

● **정부, 개성공단 외 방북 전면유보(5/25, 통일부)**

- 정부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 후속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고려,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 방문을 당분간 유보토록 할 방침”이라며 “내일(26일)부터 평양 지역과 금강산 인근지역에 대한 방문을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힘.
- 천 대변인은 “다만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인원의 방북은 내일 이후에도 허용할 것”이나 “정부는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방북인원의 규모를 줄여 나가도록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



첨부1: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전문]

전쟁도 평화도 아닌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정전협정은 안중에도 없이 교전일방인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고립압살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에 편승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발악적인 책동과 직결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으로 진행된 미국주도하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무모한 ‘전면참여’ 책동이다. 원래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봉쇄와 날강도적 해상봉쇄를 노린 이 ‘구상’에 괴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시도는 부쉬행정부때부터 끈질기게 추진되어왔다.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의 현 집권자들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영원한 국제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대면서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여기에 끌어들이었다.

이것은 국제법은 물론 교전대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명백한 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와 굴종으로 체질화된 리명박역적패당은 상전의 요구에 맹종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여’를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이로써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1.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대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여’를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이에 따라 평화적인 우리 선박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로 락인하고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2.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대조선압살책동에 열이 뜬 나머지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다못해 협정조인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쫓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이는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구소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가게 될것이다.
3. 당면하여 조선서해 우리의 서북쪽 령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 선박들의 인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제와 이명박 패당이 공정한 국제법 요구와 쌍방합의를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만 그것을 리행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약육강식의 미국식 논리가 우리에게도 통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큰 오산은 없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주변대상을 단숨에 타고앉거나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과 우리식의 타격방식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일단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은 상상밖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09년5월27일 12시33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대북협의 美 대표단 일본 도착(5/31)

-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순방에 나선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 정부 합동대표단이 31일 첫 방문지인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했음. 이들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 각국 외무 당국자들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일본 도착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 지도부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생산적이며 심도 있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1일 나가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과 회동, 북한의 핵실험 등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및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이번 순방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스텐튼 레비 재무부 차관, 윌리스 그레그슨 국방부 아태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들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단에 레비 재무부 차관이 포함됨에 따라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일본, 한국 등과 실무적 차원의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中전문가 “北ICBM, 유엔 제재 이후 발사”(5/31)

- 북한은 현재 준비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 이후에 발사할 것이라고 중국의 군사평론가 량용춘(梁永春)이 31일 전망했음. 중국 국제라디오방송 ‘중국의 소리’의 분석가이기도 한 량씨는 이날 ‘중국의 소리’가 마련한 심층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은 유엔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량씨는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안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발사를 준비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압박할 것”이라면서 유엔 결의 내용이 나온 뒤에야 비로소 다음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음. 그는 “미사일 발사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결연한 표현이자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분석했음.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



연구소에서 화물열차 3량에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1기가 실려있는 것을 포착했으며 이르면 2주 후인 다음 달 중 발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北, 단거리 일시중단..ICBM 발사준비 주력”(5/31)

- 북한이 지난 25일 2차 핵실험 이후 계속해온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일시 중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핵심 정보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0일 이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더이상 관측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발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특히 “당초 서해안에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포기한 것 같다”면서 “지난 29일 오후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신형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이 사실상 마지막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다른 정보당국자도 “기술적인 문제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더이상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면서 “꽃게철이라 서해상 선박을 철수시키기 힘든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우리 군(軍)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서해상 교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에 언급,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초 이르면 내달초로 예상되던 발사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준비작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北미사일 배가 미스터리하게 침몰할 수도”(5/31)

-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좀더 강한 대응을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바다는 넓은 곳이다. 배가 미스터리하게 침몰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아랍에미리트(UAE) 일간지 ‘더 내셔널’(28일자)에 기고한 ‘긴장 수위 높이는 평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 제재의 비실효성때문에 북한 입장에서선 유엔에 도전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해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셈이라며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확산방지구상(PSI) 등과 같이 유엔의 틀 바깥에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미국 등은 북한의 잠재적 고객들이 북한 무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왔으나,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어서 예멘으



로 가던 북한 미사일이 차단당했다가 결국은 풀려나 예멘에 인도된 경우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의 핵실험 등 최근의 도발행위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정운으로의 후계 구도 구축 과정에서 생겨난 과거로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멀리 중동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음.
-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위해 기념비적인 구조물 건축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대외 관계의 악화와 외부지원 고갈, 무역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인 수입이 줄어들면 마약과 위조지폐 같은 불법활동 뿐 아니라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과 핵기술 등의 판매 활동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임.

● 한·미·일 “北도발 단호대처..보상없다”(5/30)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30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하고 도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북 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미국은 특히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해 핵 ‘확장억제력’ 제공 등 유사시 한반도 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
-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 게이츠 장관 및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의 3자 회담을 잇따라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숙의했음.
-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개발·보유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음.
- 양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는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이자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 체제와 6자회담에 조기 복귀토록 긴밀히 공조키로 했음.
- 또한 양측은 북한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에 정전협정 무효화로 대응하고 나선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음.



- 양측은 또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 매년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진행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음.

● “北,ICBM 발사움직임 확실..이동 시작”(5/30)

- 북한이 지난 25일 2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보담당 핵심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일 1기가 실려있는 것이 포착됐다”면서 “ICBM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측이 서둘러 발사 거치대를 설치할 경우 준비를 마치는 데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당국자는 또 “이미 발사대쪽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는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참모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는 미사일을 기지에 운반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만에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발사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또다른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조만간 서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군 당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관리, 南핵보유론에 “美목표는 한반도 비핵화”(5/30)

-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한국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기되는 핵보유론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의 대한 핵우산이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한국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윌리엄 토비 전 미 핵안보국 부국장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수”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 “北핵실험에도 EU 지원사업 예정대로 진행중”(5/30)

- 유럽연합(EU)의 대북 지원사업 실무진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25일 방북, 내달 9일까지 2주일간 일정으로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EU 위원회의 크리스티안 호만 공보관은 “유럽지원협력기구에 소속된 실무진의 이번 방북은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식량안보 사업을 매년 한차례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례적 활동”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통보는 실무진이 방북한 이후에 받았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EU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방북중인 실무진의 활동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EU위원회에서 대북지원을 담당하는 실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당장은 EU의 대북지원에 변화가 없겠지만 앞으로 위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며 “EU가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 반대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EU와 북한간 정치적 환경이 대북 지원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소개했음.
- RFA는 “EU의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에서 인도적 식량안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럽의 비정부 기구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민간차원의 기부금이 줄고 사업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 EU는 이러한 대북 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모두 3천500만유로(약 4천200만달러)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올해 할당된 지원금은 900만유로(약 1천만달러)임.

● 미국방 “北 핵무장 용인 못해”(5/30)

-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이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의 수출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 아시아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파괴능력을 기른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음. 그러나 북한의 군사행동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선 자세한 언급을 피했으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비해 더 많은 미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 미국무부 “北 도발행위 중단해야”(5/30)

- 이안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에 대해 “북한은 호전적인 수사와 함께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



했음. 켈리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일깨워 주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의 행동에 상응한 결과가 따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美 “北장거리미사일 관련 징후 포착”(5/30)

-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차량 움직임을 미국 위성사진이 포착했다고 AFP통신이 29일 보도.
-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 차량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의 움직임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이들 관리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은 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장과 다른 민감한 시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서 증기 등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시설을 재가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 AP통신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로 사용된 장소에서 활동 증가의 징후가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 美대표단 한중일러 파견, 대북대응 협의(5/30)

-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합동대표단을 한·중·일·러 등 6자회담 참가국에 파견할 것으로 28일(현지시각) 알려졌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서면자료를 통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이들 지역에 대한 합동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전과 관련한 추후 대응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 대표단이 4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31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연대를 통해 금융제재, 선박 임시 검문 등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면서 스타인버그 부장관 외에 미셸 플로니 국방부 차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차장 등을 한·일·중·러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北, 동해서 신형 단거리미사일 발사(5/29)

- 북한이 29일 오후 6시12분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동해상으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한발을 발사했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파악된 단거리 미사일과 전혀 다른 종류”라면서 “지난 25일 발사하려다 중단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당국은 이 지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260km로 추정하고 있지만 제원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사정 260km의 SA-5의 지대공 미사일을 1963년 도입해 동서부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이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앞서 북한은 25일 오전 핵실험을 한 후 오후 5시3분께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미사일 2발을, 26일에는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신상리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각각 발사했음. 2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이번까지 모두 6발임.

● <北핵실험> “北, 도발 계속할 듯”<러 관리>(5/29)

-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 및 서방 국가들에 대한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러시아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 29일 보도했음.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1년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전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이타르타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대사가 최근 “북한은 미국의 지시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북한이 최근 취한 행동들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년 전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강경한 대북 정책에는 더 강한 대응책으로 맞설 것이라는 뜻을 여러 번 피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는 전했다.

● 北, 중·러포함 유엔안보리와 대결 선포(5/29)

-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해 “안보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29일 밝혔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또 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유엔에 끌고 가 비난놀음을 벌린 미국과 그에 아부, 추종한 세력들에 있다”면서 “이런 나라들은 우리 앞에서는 위성 발사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말해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 후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였다”고 말해 중국



과 러시아를 겨냥해 비난한 것으로 풀이됨.

- 담화는 이런 나라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 핵전쟁연습이 조선반도(한반도)의 중심 깊이에서 감행되고 있을 때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우리가 부득이한 자위적 조치로 실시한 핵시험에 대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입을 모아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음.
- 담화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지구상의 2천54번째로 되는 핵시험”이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해도 “국제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라는 논리로 자신들에 대한 제재에 불만을 나타내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금후 사태발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결의 현 계선을 명백히 해두고자” 한다고 말했음.

● <北핵실험> “美, 北태도 변화에 고심”(5/29)

-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국가’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하게 됐다고 전, 현직 미국 관리들이 지적했음. 이는 미국이 앞으로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전 세계의 군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 경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함을 의미함.
-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관리는 현재의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며, 더 심각하고, 더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지가 드러났다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행동 양식’이 바뀐 점을 지적했음. 과거에는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의 준비 기간이 길었으며,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위협 역시 ‘내가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에 가까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는 것임.
- 클링너 연구원은 “그들은 이번에 매우 빨리 움직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외교적 수단으로 개입할 수도 없었다”면서 북한은 마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모든 외교적 수단과 협상을 포기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음.

● “美, 5자협의체 구축 대북압박”(5/29)

- 미국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협상을 통한 비핵화 실현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연대를 통해 금융제재, 선박 임시 검문 등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전함. 신문은 복수의 미국과 일본 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가 이런 새로운 방침을 설명·협의하기 위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미셸 플로니 국방부 차



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차장 등을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전함.

- 이들은 4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31일 일본을 방문, 6월 2일까지 머물며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실무 협의를 하는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 등과 회담할 예정임. 미국의 새 방침은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5개국 협의체제를 구축, 북한에 방침을 전환 하도록 압박할 방침임.
- 새 방침은 금융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시행, 핵 확산 방지 및 사치품 수출금지 등을 위한 선박 임시 검문, '핵우산'을 포함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위 의무 재확인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앞서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외교조사회장 등 여당 방미단은 28일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대북 특사를 면담함. 성김 특사는 이 자리에서 "유엔 결의로 효과가 있는 제재를 북한에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미단이 전함.

● “中, 對北 여론 악화로 난감” <WSJ>(5/29)

- 핵문제 등에서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 왔던 중국의 태도가 최근들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 이상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9일 보도함. 저널은 25일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 지식층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이 이제는 중국의 맹방이기보다는 '책임'과 심지어 위협까지 되고있다는 지식층의 시각이 중국의 실제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고 지적함.
- 중국은 그동안 거듭된 북한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재할 경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적 제재에 소극적이었음. 그러나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미국과 한국 선박등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전례없이 호전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분노시켜 신중한 대북정책을 주장해 온 중국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분석가들의 지적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 타운대 교수는 AFP 통신에 “중국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의 도전적인 핵실험과, 6자회담의 사실상 무산 등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만큼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신중한 대북정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임.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만약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유엔 재재를 지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6개월이 아닌 1-2주 내에 결정돼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아 칭구오 베이징대학 교수는 AFP통신에 전망함.



- 2차 핵실험 이후 중국내 여론도 크게 악화되고 있음. 중국의 대외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소나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관영 언론 매체들도 북한을 옹호해 온 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비판적인 논평들을 게재하고 있음. 북한과 가까운 지린성의 정부운영 연구소에서 일하는 장 유산은 “북한이 중국에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고 비판함. 장의 논평은 변화된 중국 식자층의 북한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대다수가 북한에 반대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했으나 이 같은 시각이 변하고 있는 것임.
- 중국 공산당 산하 연구소격인 중앙당교(黨校)의 장 리안구이는 “핵 무기를 폭발시키는 이웃을 두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함.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영문 웹사이트 ‘글로벌 타임스’도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함. 관영 신화통신은 ‘인접국들과 골고려운 난제들을 회피하려 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실었음. 논평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같은 분쟁들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중국이 당장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꿀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음. 중국은 대신 상황 변화를 감안해 ‘적당한 수준의’ 제재를 지지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예상함. 중국은 2006년 첫 핵실험 당시 돈과 석유 및 식품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나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중국의 기존 ‘점진적인’ 접근 방식의 대북한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전망이다.
-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혼란에 빠질 경우 국경지대가 불안해질 수 있으며 만약 북한이 붕괴될 경우 남한에 의해 통일돼 바로 인접한 곳에 친서방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임. 중국은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승계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위협통제그룹(CRG)의 분석가 앤디 질홀름은 중국이 경제적, 지정학적 현실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북한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그러나 중국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한국임. 한국은 지난 1992년 수교한 이후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중국과 비슷한 견해를 가져왔으나 2006년 핵실험 이후 한국내 분위기가 변했으며 특히 2007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일본도 이번 핵실험 이후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는 등 강경론이 일고 있어 중국의 ‘점진적’ 접근 방식은 갈수록 고립되가는 실정임.



● <北핵실험> 美전문가 “군사옵션 해결책 못돼”(5/29)

-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28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군사적 행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사태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북한문제 전문가인 헤이즈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옵션 검토’ 주장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군사적인 행동은 언제나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군 이)언급될 필요가 없다”고 덧붙임.
- 미국 내 대북협상파로 꼽히는 헤이즈 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안은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접촉하고(engage)’ 적대적인 정책에 대한 상호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문제와 관련,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핵실험을 비난하겠지만 북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는 신중하도록 권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분열 물질과 핵폭탄이 탈취, 사용, 분실, 수출될 수도 있는 지금 시점에 북한의 붕괴는 아무에게도, 특히 중국에 이익이 안 된다”고 강조함.
- 북한의 추가 행동 가능성에 대해, 헤이즈 소장은 “북한 지도부는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이나 추가 로켓 발사, 그리고 이란 같은 다른 핵개발 국가들과 ‘핵무기 동맹’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그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선언이 북한의 도발 빌미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북한이 도발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구실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함.

● 안보리, 北 해외 금융계좌 동결 검토(5/29)

-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이번 사태 발생 후 3차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 등 대북 제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P5+2 회의는 지난 26일 2차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될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한 뒤, 미·일이 중심이 돼 1차 초안을 마련함.
-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초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에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밝힘. 또한 기존 결의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해 금수 무기 품목을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음.
- 결의안 1718호에는 탱크, 헬리콥터, 미사일 시스템 등 중무기 거래를 금지했을 뿐 경화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특히 초안에는 북한의 해외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존 결의안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



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등 대북 제재 방안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결의안에서는 그 대상과 방법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설명함.

- 한 유엔 외교관은 “미·일의 안은 북한에 대한 대출과 교부금 등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은행들과의 거래를 사실상 중지시키는 방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더욱이 북한의 대외 교역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이 계좌 동결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유엔 외교관들은 전함. 북한의 해외 계좌가 동결되면 사실상 북한은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무역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 금융 거래 동결 조치가 무기 수출·입과 관련된 계좌로 한정될지는 결의안 최종 성안 단계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여행 제한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존 사우어스 영국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매우 복잡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계속 협의를 벌여나갈 것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함.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잘 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한국의 박인국 대사는 “현재 각국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 중에 있는 단계이며 명확한 초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가능한 제재 방안이 모두 거론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함.
- 이에 따라 최종 결의안 채택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함. 유엔 고위 관계자는 결의안 채택 시점과 관련, “현재 주요국들이 제기한 제재 방안을 정리한 초안이 나오게 되면 이를 다시 본국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또 최종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금주 안에 결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 존스 美안보보좌관 “北 핵무기화 갈길 멀어”(5/29)

-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고, 이를 운반할 수단을 갖기에는 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 밝힘. 존스 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안보, 오바마의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그것 자체로는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대신 “임박한 위협은 이런 기술을 다른 국가나 테러 조직과 같은 곳에 확산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가장 절박한 위협”이라고 함. 그는 핵을 무기화하고 운반수단을 북한이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는 막을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말함. 존슨 보좌관은 이어 북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우리를 놀라지 못하게 했다”면서 “그들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를 믿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고 있다”고 강조함.

-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거론하면서 “특히 중국이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함. 그는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 때문에 지금은 꽤 심각한 순간”이라고 밝힘. 그는 이어 북핵문제와 관련해 우방들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음을 전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7월 러시아 방문에서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전함.
- 존스 보좌관은 구체적인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다만 확산과 핵안전 등과 같은 문제는 전세계에서 의견이 점점 통일되고 있다”고 전세계적 공동 대처 방침을 밝힘. 그는 “북한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이란의 핵무장이 중동의 핵경쟁을 촉발시키듯이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각국이 설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존스 보좌관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 어떻게 행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강조함. 이 밖에 그는 중국, 러시아와의 공동 대응과 관련, “(핵실험) 발생 첫날부터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진심어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소 낙관적”이라고 말함.

● 페리 “장차 군사옵션 검토 여지”(5/29)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응방안과 관련, “군사적 행동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강제적인(coersive)’ 조치를 점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비(非)군사적인 옵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함.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의 핵정책’을 주제로 열린 미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외교적 방법이 여전히 성공할 기회는 있다고 믿지만, 그 외교적 방법은 의미있는 강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힘.
- 페리 전 장관은 19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이른바 ‘북폭론’을 입안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짐. 그는 “군사적 옵션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군사 옵션을) 선택하기만 했다면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도 저지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군사 옵션을) 검토는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어 그는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03년에도 북폭이 검토됐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당시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시켜야 했지만, 지금은 플



루토늄이 생산됐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딘가에 플루토늄이 놓여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003년의 ‘강제 옵션(군사 옵션)’ 가능성은 없어진 상태”라고 밝힘.

- 페리 전 장관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옵션도 한국에 즉각적으로 결과가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명확한 의견일치가 있어야만 한다”면서 “미국은 (군사옵션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동맹과 상당수준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군사옵션을 실행에 옮겨서는 안된다”고 말함. 그는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강제적 조치와 관련, “그간 우리가 적용해 왔던 제재는 북한 지도부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줬다”며 “지금 당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돈거래(금융 제재)’를 중단시켜 지도부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말함.
- 페리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내 타격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 금융 제재를 포함한 초보적 단계의 압박 수단이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점증적 압박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 수단으로 군사옵션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이어 그는 “워싱턴 일각과 다른 나라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문제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위협은 실제상황이고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그는 “그간 진행돼 왔던 6자회담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과 6-8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점은 성공적인 회담결과로 말할 수 없는 만큼 6자회담 모델로 돌아가는 것은 올바른 모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실상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함. 페리 전 장관은 “북한 핵의 진정한 위협은 북한이 우리를 겨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물질 또는 핵무기를 확산시킨다는 점에 있다”며 “북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주는 의미에 대해 “비로소 북한이 핵보유국을 지향한다는 목표가 명확해 졌다”고 밝힘. 스코크로프트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미칠 영향과 관련, “만일 버락 오바마 정부가 다른 쪽 꺾마저 북한에 대준다면 이는 이란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함.

● <北 핵실험> 체니 “북, 최악의 확산자”(5/29)

- 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추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불량 국가나 테러지원국에 핵무기 기술을 넘기는 최악의 확산자들”이라고 비난함. 체니 전 부통령은 27일 밤 CNBC방송에 출연해 “두 번의 핵무기 실험이 있었고, 시리아에 그들은 원자로를 건설했다”면



서 이같이 주장함. 그는 “북한 문제는 오늘날 최대 문제 중 하나로, 다루기가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요한 시험에 이제 직면했다”고 지적함. 그는 “그들(북한)은 과거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자였고, 시리아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원자로를 건설했다”고 거듭 비판함.

- 체니 전 부통령은 “북한이 핵을 배치하는데 성공한다면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역내 다른 국가들도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과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힘. 그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이 비핵 정책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대만과 한국도 그렇다”면서 “중국은 역내 전지역이 덜 안정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대북 제재 동참 필요성을 제기함. 그는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 경제를 조일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정한 제재는 없었다”고 지적함.
- 이밖에 그는 예산이 삭감된 미사일방어(MD) 개발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함.

● <北핵실험> 러시아 “유엔 결의안 지지할 것”(5/28)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도출된 결의안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힘.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 과거 서방의 강력한 대북 제재 지지 요청에 미온적이던 러시아는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이번 주내 제재 결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미국과 일본 양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등 5개국에 배포했다고 전함.
- 러시아 정부는 또 제재와 동시에 북한을 6자회담에 돌려 놓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조함.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 통로를 통하는 것 외에 진정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책임 있는 대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고 말함.

● 日총리 “제재 동반한 UN 결의 추진”(5/28)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에 대해 “제재를 동반한 결의문이라는 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추가 제재를 포함한 결의문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 아소



총리는 또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대해 “제재의 의미가 있는 나쁜 의문이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일본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데는 찬성한다”고 말함.

- 그는 또 미국에 대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기대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도쿄(東京)신문은 아소 총리의 이런 발언은 지난 26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
- 이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전, 사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함.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로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함.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상황과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결정할 방침임.

● <北 핵실험> “중국과 소원..치명적 실수”(5/28)

-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유일한 우방인 중국과 관계가 멀어졌다면서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북한에) 치명적 실수”라고 28일 지적함. 이 신문은 중국이 그동안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난민유입 사태를 우려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오래된 고객(북한)으로부터 조용히 플러그를 뽑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함.
- 중국이 식량, 에너지, 사치품 등 금수를 통해 북한에 충격을 줄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중국은 김(김정일 정권)이 너무 멀리 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마초적 행동”으로 동북아시아에 너무 큰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73%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나설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봄. 당장 단둥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을 차단해도 북한 정권에 ‘충격’을 줄 수 있음.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이 마피아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상위 계층에 사치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충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은 아울러 자국의 금융시스템으로 북한 자금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음.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연구원은 “중국이 걱정한다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외교적 방법에 의존하던 태도를 버리고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영국 일간 가디언은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진단함.
- 가디언은 현상유지가 더는 중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음.

○ <美, 北 핵사용시 핵으로 응징할 듯>(5/28)

-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핵 억제력’으로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의 개념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은 ‘핵우산’(nuclear umbrella)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으로 표현됨. 핵우산이 포괄적이고 정치적 개념이라면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보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개념임. 일부 정치권에서 핵우산을 구체화하도록 미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우산과 확장억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임.
-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확장억제 개념 자체가 핵우산을 군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는 설명인 것임. 미국은 1978년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1992년 모두 철수한 뒤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함. 이후 핵우산 개념은 2005년 SCM 공동성명 때까지 명시되었지만 2006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확장억제’로 바뀌었음. 국방부는 당시 SCM 실무협약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더욱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요구해 이 개념이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임.
- 확장억제 개념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보복 응징타격을 가한다는 개념임. 즉 미국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으로 응징한다는 것임. 미국은 2002년 NPR(핵계획검토보고)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 수단으로 기존 3대 전략무기에다 다양화된 타격수단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념을 수정함. 즉 지하 군사시설이나 핵과 생화학무기 시설을 실제 핵무기로 응징 보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초정밀타격체계를 확장억제 수단으로 추가했다는 것임.
- 특히 적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 본토나 동맹국의 지상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활동, WMD 사용 징후시 경보,



탐지, 제독까지의 수단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임. 한·미간 합의에 의해 SCM 공동성명에 명시한 확장억제는 이처럼 변화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임. 한·미 양국은 2006년 SCM에서 확장억제 개념을 공동성명에 반영기로 합의한 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장억제 개념을 구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짐. 한·미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SCM의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개념을 재차 명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일각에서는 확장억제 개념에서 보완된 수단이 미국과 일본이 공동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현시점에서 한국이 핵우산을 보다 구체화해주도록 미측을 압박할 경우 결국은 천문화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MD체계에 받을 담그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 때문에 1991년 노태우정부 당시 선포된 비핵화선언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미측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28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짧은 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과거 핵주권과 관련한 사항을 너무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를 재검토해 핵무기 개발 이전 단계까지의 핵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北핵실험> 러시아, 대북 군사감시 강화(5/28)

-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힘. 인테르팍스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조기 경보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접경지역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러시아는 그러나 해당 지역으로 군사장비를 보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밝힘.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함.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 안보에서 “히스테리 증상”을 경계함. 한편 콘스탄틴 코샤체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함.



● <北핵실험> 페리 “세계 비핵화 난제 상기”(5/28)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등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전 세계의 핵무기 제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확산 위협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페리 전 장관과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 찰스 퍼거슨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핵위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힘.
- 이들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하는 목표를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핵 폐기를 달성하는 것에는 여러 해가 걸릴 것 같다면 미 국과 그 상대방들이 현재의 핵 확산과 핵 테러주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 목적을 이룰 희망이 없게 된다고 지적함. 이들은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5개의 뼈대 위에 구축돼야 한다면서 ▲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략적 대화의 재활성화 ▲ 국제 핵 비확산체제 강화 ▲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의 재확인 ▲ 미국의 핵 억지력 신뢰성 유지 ▲ 세계 핵무기 및 무기 전용 가능성 물질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들은 특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 기술의 확산이 세계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전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선전했고 이란도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믿기 어려운데다 이로 인해 다른 중동국가들도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들은 핵 확산과 핵 테러의 위험은 현실이고 긴박하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말함.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 핀란드 의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역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을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핵무기 감축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힘.

● <北핵실험> 美, 6자회담 회의론 확산(5/28)

-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핵 6자회담 ‘소생’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했을 때만 해도 일정한 ‘냉각기’를 거치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적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이후 비관론이 팽배해진 분위기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2차 핵실험이라는 ‘원 투 펀치’를 맞고 6자회담이 녹다운 직전까지 간 상태여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



터뷰에서 “6자회담은 본질적으로 사망했으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변화된(revised)’ 형태의 다자적 메커니즘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프리처드 소장은 새롭게 태동할 다자협의체도 6자가 참가하는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의제와 성격을 달리하면서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프리처드 소장의 주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의장성명에 반발, 6자회담 거부와 ‘사망’을 선언한만큼 기존의 6자회담 틀로 복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하고 있음.

- 이런 관측은 백악관의 비확산 담당 ‘차르’인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의 최근 예측과 궤를 같이함.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미 이달 초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정확히 짚어 낸 데 이어 “북한이 9개월 이내에 협상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함. 그는 북한이 복귀하게 될 협상의 장을 6자회담으로 표현하지는 않아 다른 형태의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에 문을 열어놓음.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3-4개월 내에,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미 행정부의 분명한 대북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때가 되면 기존의 6자 회담이 다시 시작되거나 다른 형태의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변형된 형태의 다자협의체 태동 가능성에 견해를 같이함.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 “북한이 복귀하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북한의 복귀가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6자회담 회의론은 이미 미 외교수장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일찌감치 ‘점화’한 측면이 있음.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 30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 시점에 6자회담에 복귀, 핵시설 불능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던 것. 이와 맞물려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6자회담 기능상실에 대비한 대안검토에 착수했음을 강하게 시사함.
- 결국 미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6자회담 회의론 또는 무망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 같은 미 행정부의 상황인식 및 내부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임.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현 단계에서는 6자회담의 사망을 운운하기는 힘들며,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결의안 채택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때”라며 “6자회담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다자협의체 문제는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임. 또 이 소식통은 “새로운 다자협의체가 생긴다면 현재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어느 국가를 특정해서 ‘빠져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지금의 6자도 협의조정이 어려운데 참여국을 더 늘리는 것도 생각하기 힘든 만큼 참가국 수는 계속 6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北핵실험> “중의 대북지원 중단이 관건”(5/27)

-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 도전을 계속함에 따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도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중국을 설득시켜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느냐는 숙제에 직면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7일 보도함. 그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이뤄질 때마다 대북제재를 추진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석유 및 각종 소비재 지원을 계속해옴.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기존의 태도를 바꿀지 여부. 이와 관련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과거보다 수위를 높여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조치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음.
-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 전략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북한 핵무기보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더 우려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도우면서도 북한을 망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북한이 핵실험뿐만 아니라 26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등 도발행위를 계속하는데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핵심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존 볼튼 전 유엔주재미국대사는 “중국만이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우려해 대북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북한정권 붕괴시 수백만의 난민들이 중국내로 밀려들 개연성을 우려한다는 것. 미 의회입법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도 미국 국채의 다량 보유 등 미-중간 경제관계를 고려치 않을수 없다고 분석함.
- 중국이 대북제재 동참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북한 은행의 거래제한 등 금융제재와 핵물질 수출입 의혹이 있는 선박에 대한 검문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브루킹스연구소의 옹공단 선임연구원은 전망함.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안정과 비핵화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이같은 판단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북지원을 재고하는 등 태도변화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함.

● 시진핑 “北 상황악화 중지 요구”(5/27)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27일 북한의 2차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시 부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중인 이상희 국방부 장관



과의 회동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의 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동에 참가한 소식통들이 밝힘. 시 부주석은 이어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시 부주석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재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핵확산 방지, 지역내의 안정과 평화라고 재차 강조함. 시 부주석은 “북한의 핵 실험은 이런 중국의 원칙과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중국은 많은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견결하게(강하게)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함.
- 이상희 장관은 “중국이 북핵 실험에 대해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북핵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에 대한 큰 위협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함. 이 장관은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함. 이와 관련, 회담에 참가한 실무자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군사적인 제재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였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에 제재를 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원칙적으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시 부주석은 또 한·중군사 협력과 관련, “긴 안목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이를 위해 양국군 간에 실제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군에 이를 지시했다고 말함.

● <北핵실험> 러'외무 “처벌을 위한 처벌 안 돼”(5/27)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지만 처벌을 위한 처벌은 안 된다”고 밝힘.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이타르 타스 등 러시아 현지언론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손상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함.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을 만드는 쪽으로 사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처벌만을 위한 처벌은 안된다”고 강조함.
- 러시아는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보이고 있음. 핵실험 당일 즉각적으로 비난 성명을 낸 데 이어 26일에는 28~29일 평양에서 예정된 북한과의 정부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위원회 무기 연기를 발표함. 이날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 역시 어떤 식으로든 유엔 안보리가 확고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



넷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 자체보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통한 미국의 이익을 강조함.

● <北 핵실험> 伊 언론 “중국 궁지에 몰아”(5/27)

-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특히 북 핵실험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특파원이나 동북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연일 신문에 싣고 있음.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가하기로 한 이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함.
- 라 스타파지는 26일 프란체스코 시시 베이징 특파원의 특별 사설을 싣고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평함. 이어 대만 집권당인 국민당 우보송 주석의 중국 방문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1950년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대만 정벌을 포기하고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함. 시시 특파원은 중국이 대만이나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북한을 지지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함.
- 동북아의 안정을 원하는 중국은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한 사실에서 느낄 수 있다고 전함. 또한 이탈리아 안사 통신 사장이며 국제 외교 전문가인 보리스 비안케리씨는 라 스타파지에 특별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동북아 상황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평함. 그는 또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의 하나인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을 통한 군사적 시위는 북한의 앞날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日, 안보리 대북 제재해도 임검 안해”(5/27)

- 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북한 선박에 대한 ‘임검’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자위대가 실제로 임검을 실시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7일 보도함. 이는 일본의 주변사태 관련법에서 임검에 상당하는 ‘선박검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함.
-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했던 지난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는 필요할 경우 북한 선박 등에 대해 화물검사(임검)를 포함한 협조 행동을 각국에 요구하는 제재결의를 채택한 바 있음. 그러나 일본 정부



는 주변사태법이 규정하는 “우리나라 주변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인정을 보류, 관련법인 선박검사활동법에 입각한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에는 나서지 않았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도 “주변사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짐.

● <인터뷰> 리언 시걸 동북아안보협력 국장(5/27)

-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26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함. 시걸 국장은 이날 뉴욕 브루클린의 사무실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죄와 벌’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에도 성과를 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특히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등 제재 조치를 적대적인 정책의 증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아마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추가로 더 할 것이고, 핵 실험도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대북 제재보다는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시걸 국장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의 다른 한반도 전문가들과 북한을 방문하기도 함. 다음은 시걸 국장과의 일문일답.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진짜 목적은.
 - ▲ 북한이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 내부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핵무기 등에 의한 전쟁억지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6자회담에서 취한 행동과 관계가 있다. 2007년 10월 베이징 합의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에너지 지원 등을 대가로 불능화를 하기로 했지만 한·미·일은 북핵 검증의정서의 문서화를 원했고 당초 베이징 합의에 없던 검증의정서 문서화 합의는 작년 12월 실패했다. 이것이 대북 에너지 지원 중단 발표로 이어지자 북한은 바로 불능화를 중단하고 인공위성이라는 명목으로 미사일 테스트 준비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달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통해 제재에 나섰고 북한은 이를 구실로 핵 실험 준비에 들어갔다.
 -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 ▲ 북한은 이제 핵실험을 했고 관련국들은 이를 응징하는 ‘죄와 벌’ 방식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죄와 벌’ 방식은 북한 문제에서 전에도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 어떠한 제재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



의도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북한은 상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북한은 이를 적대적인 정책의 증거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아마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추가로 더 할 것이고, 핵 실험도 이번엔 잘 안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이고, 북한은 이것이 자신들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이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 우리가 북한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노력하지만 성과를 거둔 적이 없다. 제재가 진짜 성공을 거두려면 북한과 국경을 맞댄 한·중·러 3국이 진짜로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3개국 누구도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2006년에도 미사일 발사로 안보리 제재가 있었지만 10월에 핵 실험을 했다. 이는 북한이 어떤 제재를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봉쇄하고 제재해도 실제로 북한에 영향이 없다. 오직 정치적 영향이 갈 뿐인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효과가 난다.

--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나.

▲ 유일한 방안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에도 대화를 안 하는 동안 북한은 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갖게 됐다. 이제는 조만간 이를 실용화할 수도 있다. 협상을 해야만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 대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도를 해야 한다. 협상에 복귀하면 북한에 적대성을 해소하는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을 시작하면 핵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무기를 없애는데 얼마나 더 걸려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를 알아내는 것은 협상밖에 없다.

-- 구체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적대정책을 버리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는 외교관계는 물론 대통령의 방북, 안전 보장, 투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미국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관련국들이 자신들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막지 않고,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을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북한에 강인함을 주지만 번성은 아니다. 번성하려면 북한이 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 군 생산시설을 민간 산업시설로 바꿔야 하는 데 이는 적대적 환경이 제거돼야 가



능하다. 두 번째로 외부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도 한국·일본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강성대국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한·미·일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정치적 환경이 변해야 경제 변화에 나설 리스크를 북한도 감수할 것이다.

-- 북·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려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협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일본과의 양자 대화도 원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 일본에 새 정권이 들어선다면 북한과 일본의 양자 대화를 목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양자 대화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정말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도 있지만 이는 아무도 모른다.

● 한·러 “北핵실험 정당화될 수 없다”(5/27)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7일 전함. 양국 장관은 26일 오후 6시10분부터 20분간 진행한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7일 전함.
- 양국 장관은 또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는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함. 외교부 당국자는 “5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러시아”라며 “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서도 6자회담 복원을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역시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함.

● “北, 핵재처리시설 가동 가능성 매우 높다”(5/27)

- 북한이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영변 핵재처리시설의 가동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27일 알려짐. 외교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4월14일 핵연료를 재처리한다고 발표하고 그 이후 증기생산공장이 계속 가동됐다”면서 “그렇다면 벌써 핵재처리시설 복구를 완료한 뒤에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이 소식통은 또 “지난달 중순께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 저장고 출입문이 여러 차례 개방된 것이 확인됐고, 지난달 말 이후에는 재처리를 위한 증기



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관측됐다”고 설명함.

- 또 “이달 초에는 핵연료 제조공장 생산건물에서 증기가 관찰됐고 중순께 주변에서 화학물질 운반차량이 발견돼 뭔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함.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미 예고해 놓은 조치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2차 핵실험도 이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함. 특히 이 소식통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간 정보공유 부재 지적에 언급, “한·미간 완벽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4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정보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함.

● <인터뷰>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연구소장(5/27)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26일(현지시각) 북한이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선언을 빌미로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힘. 강 소장은 이날 오후 USC 한국학연구소장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PSI 참여는 상징적인 조치”라면서 “북한이 한국의 PSI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전쟁행위를 벌이는 데는 아주 신중할 것”이라고 말함.
- 강 소장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과잉반응(over-react)’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며, 미국이 관련국들을 무시하고 북미 양자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강 소장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와 함께 북핵대응전략을 다룬 ‘북핵퍼즐(Nuclear North Korea)’이란 책을 저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학자로 지난 1월 USC에 부임하기 전까지 다트머스대 교수를 지냄. 다음은 강 소장과의 일문일답.

--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 ▲ 핵실험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북한 내부적 요인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 정권은 김정일 위원장의 확실한 후계자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다. 따라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내부적으로 과시하고 정권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또 핵실험을 통해 외부 세계에 북한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국가들에 김 위원장의 약화된 건강상태를 이용해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 이제 북핵 6자회담은 끝나는 것인가.

- ▲ 6자 회담은 북한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부분적으로는 미국 자체가 아직 외교팀을 완전하게 구성하지 못한 이유도 있



다. 키트 캠벨(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은 아직 미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한반도 라인이 구성될 때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3-4개월 내에,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분명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때가 되면 기존의 6자 회담이 다시 시작되거나 다른 형태의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미국이 북미 양자대화는 하지 않는 것인가.

▲ 미국은 가끔 북한과 비공식 양자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무시하고 북한과 본격적인 양자대화를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나 일본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다. 두 나라는 북한 문제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지지와 승인(approval)이 있을 때만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요한 당사국이다. 따라서 기존의 '6자 회담'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 다자간 협의의 틀이 생길 것으로 본다.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자세는 더 강경해지는 것인가.

▲ 오바마 대통령이 핵실험 후 강경성명을 발표했지만 미 행정부는 '과잉반응(over-react)'하기보다 '소극적인 반응(under-react)'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에서 너무 지나치게 강경한 레토릭을 할 경우 북한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시킨다는 확고한 생각이 미국 정부 내에 있다. 따라서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하되 상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미국은 북한과 경제적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재가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한데 중국이 북한에 강한 제재는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순화된 태도를 보이도록 어떻게 압력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 한국의 PSI 참여 선언 후 북한의 추가행동 가능성은.

▲ 한국의 PSI 참여는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핵물질 확산은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북한은 지금 그렇게 많은 플루토늄이 없다. 북한이 한국의 PSI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아주 레토릭이 강한 나라다. 작은 군사적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전쟁행위를 벌이는 데는 아주 신중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이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가진 플루토늄 양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북한의 행동이 갈수록 빨라진다는 점이다. 이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장기적 플랜을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한다고도 볼 수 있다.

● <北핵실험> “장기적인 포용정책이 최선의 전략”(5/27)

-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장기적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핵확산 반대 단체인 ‘플라우세어즈 펀드’의 폴 캐롤 프로그램 디렉터는 26일 CNN 인터넷판에 실린 논평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제재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장보다 북한의 붕괴를 더 두려워하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제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북한의 대한 새로운 유화책 역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캐롤은 지적함. 몇몇 이들은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화책 역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긍정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어려운 시기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장기적인 포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캐롤은 지적함. 그는 장기적인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실종미군 유해 발굴과 같은 군사 대화, 대학 교환 프로그램 등을 제안함.
- 캐롤은 또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이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최대 20킬로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정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과 결합된 핵탄두 개발 능력을 보유하려면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북한 핵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위협은 북한이 테러리스트 등에게 핵기술과 핵물질을 넘길 수 있다는 데 있다고 그는 지적함.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는 ‘조용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일단 미 의회 분위기는 강경함.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에드로이스 의원은 미국과 전 세계가 북한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엔 사찰단 추방, 미국 기자 구금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이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임.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의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



원장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들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핵화 제안만이 안보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함.

- 의회 내 강경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대북정책을 수정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고 있음.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이는 무엇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플레이크 소장은 2006년에는 국제사회가 부시 정부를 비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함. 한국의 보수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잇달아 내놓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분위기도 2006년과 다르다고 플레이크 소장은 지적함. 플레이크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비명을 질러떨 때마다 일일이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치 않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금 곧바로 북한과 대화재개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함.
- 보수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아이러니하게도 부시 정부와 같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함.

● <日아소 총리, 적기지 공격론 옹호 논란>(5/27)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라 자민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위대에 의한 적(敵)기지 공격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됨. 그는 지난 26일 밤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정한 틀을 정한 뒤에는 법리상으로는 (적기지 공격은) 가능하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쇼와(昭和) 30년(1955년)대부터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27일 보도함.
- 이런 발언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했지만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논리상으로는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일본 언론은 해석함. 선제공격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소 총리의 발언이지만 총리 측근들은 “종래의 정부 견해 범위 내의 발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은 전함.
-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총리 내각에서 발표한 ‘자위의 범위’에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이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한 것이 있음. 일본 극우세력의 적기지 공격론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이미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전후해 자민당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앞서 2006년 7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명목으로 같은 주장이 제기돼 왔다.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관방장관도 “자위대가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음.

- 그러나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일본 헌법이 정한 전수(專修)방어 즉, 자위대의 임무는 일본 열도의 방어에 국한한다는 개념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와 상충되는 만큼 위헌 등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임.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행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전쟁 및 전투력 포기를 명기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수방어의 명목으로 자위대를 보유해 왔다.
- 이에 대해 주변 국가들로부터 평화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헌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아 옴. 이후 1956년엔 정부 견해를 통해 적국 기지 공격능력이 ‘자위권의 범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소 총리나 다른 극우세력들의 적기지 공격론은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임.

● “美, 1시간전 北 통보받고 즉시 韓에 전달” <RFA> (5/27)

- 북한은 핵실험 약 1시간 전에 미국측에 실험계획을 알렸으며 미국은 이를 “즉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에 통보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6일(워싱턴 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관한 RFA의 질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겠다는 의도를 지난 24일(현지 시간) 통보해와 이를 한국 정부에 즉시 알렸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당시 북한은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국무부에 통보했다”며 “통보 시점은 핵실험 약 1시간 전”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는 의사는 한국 외에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에도 함께 통보됐다”고 덧붙였다고 방송은 전함.
- 이에 반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핵실험) 30분 전에 뉴욕 실무채널을 통해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핵실험이 감행되고) 우리의 지진계가 관측돼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통보했다”고 말해 미국측의 통보가 핵실험 이후 이뤄졌음을 시사함.

● <인터뷰>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5/27)

-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6일 워싱턴DC의 KEI 사무실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너무 조급하게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서는 안 되고, 동맹과 협력·협의 채널을 굳건히 하면서 최상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함.



빌 클린턴 정부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 걸쳐 대북특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과 관련,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있는데 굳이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다음은 프리처드 소장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보는가.

▲왜 지금 했느냐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실험을 했다는 점에서다.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검증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 등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일련의 행동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을 비판하는 유엔의장 성명이 채택된 것도 북한의 이런 행동을 재촉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핵실험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가.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사망 선고’까지 내렸다. 북한은 과거 미국이 (교착상태가 되면) 양자회담을 모색하곤 했던 패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설령 미국이 양자회담에 임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정류장 구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의 미래는 어떻게 되리라 보는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리라 확신이 가지 않는다. 6자회담은 사실상 ‘사망’했다. 앞으로 수개월 내에,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변화된(revised)’된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 메커니즘은 똑같은 참가멤버와 어젠다를 갖게 될 수도 있으나, 6자회담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추구했던 목표는 같은 것이다. 다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나.

▲오바마 정부가 출범후 대북정책을 분명하게 밝힌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반응해온 오바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신중한 편이었고 따라서 그런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너무 조금씩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북한이 대화에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겠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대화에 임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하며, 지금은 냉정하고 절



제된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협의를 하면서 최상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집중할 때 라고 본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과연 북한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는가.

▲물론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에 상처를 주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고,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생각은.

▲중국이 지나치게 많은 압박을 가해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그래서 중국의 이해관계가 위협에 처하는 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고, 일정수준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의해 주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파키스탄과 인도와 같은 모델로 갈 수 있다고 보는가.

▲인도와 파키스탄는 전략적 중요성에서 북한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추구하는 모델을 따르고 싶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고립된 나라이며, 미국이 북한과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전략적 중요성은 없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방법이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는 설명이 매우 군색해 질 것이다. 법률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것은 특정국가가 테러지원에 나섰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발사를 근거로 다시 명단에 올린다면 명단 자체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테러리즘 지원과 관련된 정황이 확보되지 않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북 특사파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있는데 굳이 특사를 파견할 필요는 없다. 헨리 키신저 또는 그 이상의 고위급을 북한에 보내겠다는 얘기인가 본데, 특사를 파견하는 일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보즈워스가 방북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은 오판이었으며, 계산착오였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애초보다 강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었다.



● 美재무부, 추가 對北 금융제재 검토(5/27)

- 미국 재무부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추가로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됨. 26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제한돼 있지만, 이같이 제한된 접근 수단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미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방안(옵션)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 재무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에 대해 어떤 추가 제재를 취할지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재무부의 추가 제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모든 옵션 검토”(5/27)

- 미국은 26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대북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음을 밝힘.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옵션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유한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자적 방안들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국내적 조치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특히 켈리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검토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중”이라면서 “그것도 명백히 ‘재검토의 대상(subject of review)’이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 그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관련, 결의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낳는 결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지금 가고 있는 특정한 길을 바꾸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확실히 주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함. 동시에 켈리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내가 무한하지는 않지만 문호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포용(engage)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건설적으로 포용을 선택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초는 일단 유지할 방침임을 밝힘.
- 그는 또 “다자적 접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6자회담은 분명히 그런 방안 중 하나”라고 6자회담의 지속적 추진 방침도 전함. 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곧바로 북·미간 접촉이 이뤄진 것과 관련,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을 상정하거나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고,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근본적 변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함. 켈리 대변인은 “우리



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함.

- 그는 이번 핵실험의 규모와 관련, “지진 활동이 일어났다는 것만 확인해 줄 수 있으며, 데이터를 계속 분석중”이라면서 “경험적인 자료는 핵실험과 일치하지만 아직 데이터 분석이 끝나지 않았으며, 수일 내에 분석이 끝날 것”이라고 말함. 이밖에 그는 북한이 핵실험 전 미국에 사전 통보한 것과 관련, “24일(핵실험일)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이 알려 왔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실험)시간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았다”고 전함. 한편 그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관련, “미국은 한국의 PSI 참여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PSI의 비확산 목표를 진전시키는데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함. 그는 또 대북 비판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환영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강하게 반대하며 매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함.

● <北핵실험> 美, ‘중국 역할론’ 논란(5/26)

-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 이후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음.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거중조정 역할을 해온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 댄 블루멘털 미기업연구소(AEI) 상임연구원과 로버트 케이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워싱턴포스트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것이 북핵 협상을 매듭지을 의욕이 전혀 없는 거중자(중국)를 두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함. 블루멘털 연구원 등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된 한반도를 이끌어내되,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데 맞춰져야 한다”며 “지금 외교적인 상황은 중국이 정치적 어젠다를 설정하고 물밑에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경계심을 보임.
- 이들은 특히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혹여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게 유용하다고 판명됐다면 (6자회담을 통하지 말고) 직접 북한과 대화하라”고 거듭 주문함.
-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은 26일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핵실험을 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중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함. 창은 “중국은 2003년



- 시작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해 인내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북한을 설득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책을 중재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임. 창은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성공적인 중국정책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성공적인 한반도 정책도 마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지원이 있는 한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도전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문제가 아닌 중국 문제를 떠안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함.
- 더그 밴도우 케이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발짝 물러난 상태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앞장서 평양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지원 없이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함. 밴도우 연구원은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적용할만한 추가적인 제재 수단도 적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국가,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인 북한을 관리하는데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대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교수는 포린폴리시(FP) 블로그에 띄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조언한다면 중국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함. 드레즈너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 관련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동안 PSI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기존 태도를 바꾼다면 북한의 해안을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활동을 벌이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지난해 미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함.

● <北 핵실험> “최선대응은 中 PSI참여”(5/26)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최선 대응책은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함. 대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교수는 26일 포린폴리시(FP) 블로그에 띄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조언한다면 중국으로 하여금 PSI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중국은 북한과 관련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동안 PSI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기존 태도를 바꾼다면 북한의 해안을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활동을 벌이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중국의 PSI 참여는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를 모욕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드레즈너 교수는 덧붙임. 그는 또 "묘한 이야기지만 (동북아



도에 말리지 말 것을 강조함. 신문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구체적 대응과 관련,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새 방안을 포함한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핵물질 등의 수출 기도를 막고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한국, 중국의 더욱 강력한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힘. 신문은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에 6자회담 재개를 준비하고, 북한이 사태 진전에 대한 기대를 비칠 경우 낮은 수준에서의 양자 대화에 나설 준비는 해야 한다고 밝힘.

- 하지만 신문은 “새로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추가적인 정치적 인정,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통치를 과시하면서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김정일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북한이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신문은 “대신 가능한 범위에서, 극적이지는 않지만 조직적으로 북한은 제재를 통해 질식되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의) 완화는 반드시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도발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음을 지적한 뒤 “미국의 정책은 이런 예언을 사실로 증명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힘.

● <北핵실험> “오바마에 큰 도전 부상”(5/26)

- 북한의 핵실험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새로운 안보상의 큰 도전과제로 부상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6일 보도함. 이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 뉴스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안보상의 위기사태 발발로 심야에 백악관 전화벨이 울릴때 누가 잘 대처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선거광고 및 작년 10월 조 바이든 부통령후보 지명자의 ‘미국의 적국들이 오바마 취임후 6개월 내에 그를 시험하려 들 것’이라는 예상을 연상시키는 안보상의 도전과제라고 지적함.
- 이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추가로 어떤 제재방안이 있는지의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으로서 재직했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북핵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내내 커다란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현재 100만 군대와 6-10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분열물질은 물론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로, 북한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될 경우 이는 파트타임 형식으로 관리될 수 없는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은 특히 똑같이 반미노선을 추구하면서 핵 개발 야심을 갖고 있는 이란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지 5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정했던 두 국가는 현재 전임 부시 행정부에 비해 무력 보다는 외교를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 클린턴 행정부에서 NSC에 근무했던 피터 피버 듀크대학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까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안보상의 최우선 관심사로 간주해 왔는데 북한과 이란이 자기들 문제도 최고의제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함.
- 북한 김정일은 수개월간 병석에 있으면서 권력세습을 추진중이고,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6월 대선에서 온건파의 도전을 받고 있어 현 시점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외적으로는 서방과의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음. 그린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은 매우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들이 상호 조율을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현재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북한이 25일 실시한 핵실험의 폭발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지만 북한이 핵 연료사이클에 정통한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의미함.
- 동시에 김정일이 늙어감에 따라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이들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처럼 위장할 필요성도 더이상 느끼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고 영국 리드 대학의 한국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는 지적함. 여기에 북한은 지난 2006년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오바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방안이 별로 없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은 북한에 대해 연료, 식량, 생필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을 설득시켜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많은 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대북 추가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베이징 인민대학 미국학연구소의 시인홍 소장은 이제 세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오바마 정부에게 “동등한 카운터 파트로 대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미·북간 대화가 진행된다면 새로운 토대위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함.

● “北핵실험 위력 4킬로톤 정도” <獨과학자>

- 북한 2차 핵실험의 위력이 러시아 측이 측정한 20킬로톤에 훨씬 못 미친다고 독일 과학자가 지적함. 독일 함부르크대학 키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체커 과학평화연구소(ZNF)의 마르틴 칼리노프스키 교수는 26일 “2차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은 4킬로톤가량으로 대략



3~8킬로톤 사이로 추정된다”고 말함.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지하 핵실험의 폭발력이 최고 20킬로톤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칼리노프스키 교수는 “러시아가 어떻게 그런 수치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은 틀렸다”고 말함. 칼리노프스키 박사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규모를 지진파를 측정을 통해 계산함. 그는 한편 이번 폭발이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공중에 떠다니는 방사능 입자를 채취하거나, 폭발로부터 생겨난 가스를 수집해 분석하는 길뿐이라면서, 그러나 폭발이 일어난 위치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핵실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음.
- 북한이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러시아 과학자들은 처음에 핵폭발의 위력을 5~15킬로톤 사이로 추정했으나 이후 전문가들은 폭발력을 1킬로톤 이하로 수정한 바 있음. 당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이려고 핵실험을 위장해 대량의 TNT를 폭발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당시 이 같은 의혹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됨으로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음. 칼리노프스키 박사는 “(2차 핵실험의) 위력 4킬로톤은 북한이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지만, 수 kg의 플루토늄으로 가능한 최대 폭발력과 큰 차이가 없다”며 “첫 핵실험은 북한의 기대에 비해 못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북한으로서는 합격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이번 핵실험이) 폭발력의 최대치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큰 핵폭발이었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음.

● <北핵실험> 러' 전문가 “더 강한 제재 필요”(5/26)

- 러시아 외무부 산하 외교아카데미의 예브게니 바자노프 부원장은 26일 “이번 핵실험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타격”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밝힘. 바자노프 부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북한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장한 것은 물론 힘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좋지 못한 사례를 또 남기게 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이번이 북한을 압박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며 “제재 결의에 러시아, 중국도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그는 “반드시 제재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이번 핵실험 직후 보여준 우려와 비난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바자노프 부원장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 동기에 대해 “그동안 ‘저지르면 뭔가를 얻는다’는 사고에 익숙해진 북한이 이번에도 미국 등 관련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듯 보인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액션



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또 그는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함.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에 유연한 자세를 보여왔지만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그는 또 “북핵 문제에 관한 합법적 틀인 6자 회담으로 북한이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북한이 계속 거부한다면 이번에 평양에 뭔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 <北핵실험>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5/26)

-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을 과연 핵보유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힌 다음 향후 대미 협상을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의 구도로 전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잘 짜인 계획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함.
-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석정치학자 함재봉 박사도 설령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외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거나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함.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아직 핵보유국으로 볼 수 없으며 핵보유국이 되려고 또다시 핵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하지만 북한을 아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대화를 전개해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툴레라야 박사는 26일 일간 코메르산트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여기고 대화에 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함. 빅토르 예신 전(前)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도 “강압적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수도 없고 이제는 6자회담이라는 통로도 잃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함.
- 물론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북한이 2번의 핵실험을 했으나 핵무기 확보·보유수준에 대해 분명하게 발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미가 정보판단을 하고 있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반대하겠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더라도 현 북한 정치체제나 남북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한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하지 않던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 큰 위협거리가 되고 있다”며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그런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함.

● <北핵실험> 남아공 “인류에 대한 위협”(5/26)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6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시 지하 핵실험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성명은 “남아공 정부는 이번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핵무기의 소유는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킬 뿐이며 모든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함. 이어 “우리는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게 종결하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서명과 인준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성명은 또 “북한은 모든 핵시설과 장비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인 감시 하에 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핵실험> 북유럽 각국도 규탄(5/26)

-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북유럽 각국도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덴마크 라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제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함. 아이슬란드 오수르 스카르페딘손 외무장관도 이날 “아이슬란드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핵무기 사용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힘. 핀란드의 알렉산더 스티프 외무장관은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에게 이런 핵실험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26일 핀란드 일간지 헬싱킨사노맛이 전함.

● <北핵실험> 러시아 전에 없이 강경 입장(5/26)

- 러시아 정부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전에 없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번 핵실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을 비난한 데 이어 26일에는 북한과의 정부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위원회 회의를 무기한 연기함. 이런 태도는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직후나 지난달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와는 사뭇 대조적임.
- 1차 핵실험 직후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지지했지만, 한편으



론 결의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방편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북한과 미국에 유연한 자세를 주문하면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함. 또 지난달 북한 로켓 발사 때에도 유감 성명을 내긴 했지만 강경 대응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 자제를 촉구했고,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도 여론에 밀려 서명한 듯한 인상을 줌.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에 단단히 화가 난 듯 보임.

- 러시아 외교부는 25일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였다”며 “러시아는 이번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 성명은 또 “이번 핵실험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됐으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며 유감을 표시함. 미하일 마르젤로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외교관계 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언론에 “북한의 핵실험은 모든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쏟아진 외교적 노력이 무산됐음을 의미하며 유엔과 많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함.
- 그리고 핵실험 하루만인 26일 러시아는 28~29일 평양에서 예정된 북한과의 정부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위원회 무기 연기를 발표함. 러시아는 ‘기술적인 문제’를 연기 사유로 들었지만 이번 핵실험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음. 이같은 움직임은 역내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의 핵무기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러시아 지도부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음.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오는 12월에 시한이 만료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음.
- 또 일각에서는 지난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 당시 북한이 보여준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음. 당시 라브로프 장관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그럴 의사가 없다’라는 한마디로 일축, 무안을 준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서운했던 것으로 알려짐. 라브로프 장관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해야 했어야함.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러시아 측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는 실험 직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짐.
-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지난달 로켓 발사 때 북한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이번에도 사전 통보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함. 그러나 러시아가 이번 핵실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사전 양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음. 일각에서는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안



보리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여론에 동조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음. 한편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곧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제재와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北핵실험> 中 “북한에 직접 입장 표명”(5/26)

- 중국 정부는 26일 “북한이 전날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입장을 북한에 직접 표명했다”고 밝힘.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실시 이후 북한측과 접촉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그는 “중국은 동시에 관련국들 모두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북한에 전달한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은 공개하지 않았음.
- 마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과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 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 중국은 결사 반대한다”고 되풀이함.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며 6자회담의 궤도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함. 마 대변인은 관련국들의 협상 여부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이미 긴급 협상에 돌입했으며 의장도 각국의 공동입장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소개함. 그는 이어 “중국은 앞으로도 관련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마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즉답을 피함. 그는 다만 “관련국들은 냉정하고 타협적으로 대처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안보리의 행동도 목표 실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음. 마 대변인은 대북 경제제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 반대, 동북아 평화 유지는 중국 정부의 불변의 입장”이라며 “이는 관련국들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답변함.
- 그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전 사전 통보 여부와 관련,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사전 통보를 받았음을 간접 시인함. 마 대변인은 10월1일 신중국 건국 60주년 기념일에 북한 지도부를 초청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현재 기념행사를 준비중”이라고만 답변함. 그는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에 대한 입장과 관련, “동북아 정세가 복잡한 만큼 관련국들은 평화와 안정 유지에 유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함.



● <日, 대북제재 강화에 ‘한계’>(5/26)

- 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과 연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물론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의 경우엔 중국과 러시아 등이 결의에 반대하는 바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격앙된 만큼 제재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유엔 결의가 채택된다고 해도 북한이 이미 2006년 유엔결의 1718호나 올 4월의 의장성명 등 국제사회의 의사를 무시해 온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음.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일본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미·일이 긴밀히 연대해 안보리 결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하고 유엔 안보리차원에서 새로운 제재결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한 것이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등과 공조를 확인한 것도 이런 방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수 저런 수를 써도 북한은 무시할 것”이라는 무력감도 정부 관리들 사이에 나오고 있음. 한 정부 관리의 “이미 일본이 가능한 대북 제재는 사실상 다 동원한 만큼 추가로 취할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북·일 간 경제 거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 않느냐”며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보다는 강력히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함.

● ASEM 외교장관, ‘北핵실험 규탄’ 성명(5/26)

- 아시아·유럽(ASEM, 아셈) 외교장관들은 25~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9차 아셈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별도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6일 밝혔다. 아셈 외교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6자회담 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및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결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함. 이들은 또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유명환 외교장관은 앞서 25일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



리 결의 1718호 및 6자회담 합의를 위반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하고 아셈 차원에서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합되고 엄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번 성명 채택을 주도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北핵실험>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 옵션(5/2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제사회의 새 대북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로이터 통신은 26일 국제사회가 새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제재 방안들과, 이미 적용 중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모아 정리함.
- ◇ 새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제재 방안: ▲ 새로운 유엔 무역 제재안이 채택될 수 있음. ▲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은 지난 2006년의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유엔 제재안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그러나 북한으로 유입되는 에너지·식량 지원까지 줄이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북 제재조치 강화가 무역량 감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중국은 또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거나 중국-북한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새 제재안이 나올 경우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임. ▲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음. 미국은 또 자체 무역·금융 제재 조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음. ▲ 한국 정부는 북한과 공동 운영 중인 개성공단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방안은 한국 정부가 현지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권의 외화 조달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 일본 정부가 새로운 단독 제재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북한-일본 간 접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안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음.
- ◇ 국제사회가 이미 적용 중인 대북 제재 조치들: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비롯한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에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그해 10월 14일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함. 1718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 사치품을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 WMD 프로그램 관련 인사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 등도 포함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2009. 4. 13.)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8일만인 지난달 13일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 안보리 산하 제재위가 대북 결의 1718호 이행을 위한 제재 대상기관 및 품목을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1718호 이행의 기반을 마련함. ▲ 유



엔 안보리 결의 1695호 =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비롯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채택됨. 유엔 결의 1695호는 북한에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대량파괴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 기술, 자금이 유입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 기업들, 혹은 북한 선박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이 일본 내 항구에 기항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일본은 또 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쇠고기와 캐비아, 참치, 고급 승용차, 오토바이, 카메라 등의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 국제사회가 지난 1996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국산 물품 및 장비의 대북 반입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北, 동해서 또 단거리미사일 발사(5/26)

- 북한이 26일 오후 동해안에서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힘.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정보당국에 포착됐다”면서 “정보당국이 현재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과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전날에도 핵실험에 이어 낮 12시8분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1발을, 오후 5시3분께 강원도 원산시에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과 23일 동해에 접한 김책시와 원산에서 각각 130km 떨어진 해상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선박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음. 이와 함께 북한은 서해지역에서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됨.
- 북한은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평안남도 증산군 인근 서해상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해 오늘과 내일 중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서해지역에서 발사를 준비 중인 미사일은 실크웬(83~95km)을 최대 사거리 160여km로 개량한 KN-01 지대함 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사일은 길이 5.8m, 직경 76cm, 무게 2.3t에 이룸.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일단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함정에서 함대함 미사일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군당국은 핵실험에 연이어 전방위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력시위’ 수준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조치로 분석하고 있음.



● <北핵실험> “북한 진정한 위협 못 돼”(5/26)

- 북한이 비록 핵실험을 했지만 미국과 이웃 국가에 진정한 위협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미국 내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더글러스 H. 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연구 부원장은 25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많은 수의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산업적 역량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함.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한국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통해 한국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북한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팔 부원장은 과거 레이건 행정부와 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일했고 중앙정보국(CIS) 선임분석가로도 근무함. 그는 북한 핵실험 동기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서명국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와 매우 유사한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는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웃국가들뿐 아니라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 그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관련, “사태 해결의 유일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참여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의장국)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려놓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함. 팔 부원장은 “최근 북한이 바짜 김 위원장의 아들(후계자)을 선전하는 것으로 미뤄 정권 계승 수순 밟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듯 보인다”며 “그를 부각시키려면 군(軍)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핵미사일 능력은 그 핵심 중 하나다”라고 분석함.

● <北핵실험> “北핵-로켓 기술자 이란 방문”(5/26)

-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자와 공작원 50여명이 지난달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란 중부 나탄즈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이런 행동이 북한의 지난 25일 핵실험과 관련이 있는지가 주목되는 한편 그동안 플루토늄형 핵개발을 진행해 온 북한이 추가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기술을 입수하려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측은 지난달 로켓 발사 당시 이란측의 군 관계자와 과학자 10명 이상을 초대, 로켓 발사 기술과 관련해 교류를 한 것으로 판단됨.
- 그 후 이번은 북한의 기술자와 공작원 일행이 이란에 입국, 나탄즈를 찾은 만큼 양국 간 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란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핵 관련 기술 협력을 부정해 옴. 한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연설에서 자국이 우라늄 형 핵무기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5천~6천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나탄즈는 중



심 시설로 여겨지고 있음.

- 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북한이 일본 등으로부터 플루토늄형 핵개발에 필요한 부품 입수가 어려워지자 우라늄형 핵기술 입수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이 신문에 말함.

● <北핵실험> “‘낮은 한자릿수’ kt 수준”<CTBTO>(5/26)

- 북한이 25일 실시했다고 주장한 핵실험의 규모는 일부 지적과 달리 지난 2006년 실시한 첫번째 핵실험보다 ‘약간 큰’ 정도의 것이라고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기구(CTBTO)가 밝힘. CTBTO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실험에 따른 진도는 리히터 지진계로 4.52를 기록했으며 2006년의 4.1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이라고 밝힘. 앞서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 이번 핵실험이 위력이 20킬로톤(kt)으로 2006년 실험의 규모로 알려진 1kt보다 훨씬 크다고 보도했음. 1kt의 폭발 위력은 TNT 1천톤(t)에 해당함.
- CTBTO는 핵실험에 따른 지진이 이전 실험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발생했다면서 폭발력은 ‘낮은 한자릿수 킬로톤(kt) 범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티보르 토트 CTBTO 사무총장은 북한 측의 이번 핵실험이 ‘잘못된 방향으로의 잘못된 진전’이라고 비판함.

● <北핵실험> ‘남미 ABC’ 비난 성명(5/26)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이른바 ‘남미 ABC’ 3개국이 25일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함. 브라질 외무부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브라질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힘. 성명은 이어 “브라질 정부는 북한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신속하게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재개되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뜻과 함께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지역적·세계적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앞서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브라질리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당시 회담에서 아모링 장관과 박 외무상은 통상 확대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개발 계획, 인권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해 평양 주재 대사관을 개설한 브라질은 남미에서 쿠바에 이은 2번째 대북 수교국으로 2001년 3월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북한은 2005년 브라질리아에 대사관을 개설함.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 외무부도 “북한이 국제 공동체의 호소를 외면한 채 또다시 핵실험



을 실시했다”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냄.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북한에 대해 6자 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에 대해 NPT 복귀 및 규정 준수를 요구한다”고 말함. 칠레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함.

● 안보리 “새 대북 결의안 작업 착수”(5/2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명백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함. 순회 안보리 의장을 맡은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문을 통해 강한 어조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안보리 결의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마련 작업과 관련, 유엔 외교관들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함.
- 안보리가 제재 논의를 착수하는 시점에서 의장이 공식 발표문을 통해 해당 국가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결의안 작업 착수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임. 추르킨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3개항의 발표문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strongly opposition)하고 규탄(condemnation)한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clear violation)”이라고 규정함.
- 발표문은 또 북한에 대해 “기존 결의안 1695, 1718호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며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도 결의와 성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두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조속히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 이해관계국 회의(P5+2 회의)에서도 단호하고 신속한 대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박인국 유엔 대사가 밝힘.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 측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박 대사는 전함. 미국의 수전 라이스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이 사안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은 강력한 조치가 담긴 강력한 결의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라이스 대사는 15개 회원국들이 새 결의안 마련 작업을 26일부터 시작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고, 다카스키 유키오(高須行雄) 주유엔 일본 대사는 “북한의 핵 실험은 전 세계를 향한 도발적 행동”이



● <北핵실험> “美 대북정책 수정 필요”<타임>(5/26)

- 북한의 25일 핵 실험은 ‘협상용’이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되는 만큼 외부 세계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시사 주간 타임이 보도함. 타임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는 가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대북정책 수정문제는 조만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면으로 직면해야 할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이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있고, 김정일은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군 장성들과 만나 2012년까지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의 운반능력을 결합한 ‘핵 보유국’ 지위를 달성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또 작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은 현재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후원 아래 올해 26살의 셋째 아들 김정운으로 권력을 세습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정보 분석가들은 보고 있으며, 북한 군부는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타임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향상시켜온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분석이 옳다면 외부세계의 대(對) 평양외교는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부터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타임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 소집, 러시아는 우려 표명 그리고 중국도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태도를 바꿀 기미는 전혀 없다고 지적함. 특히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가 마련한 제재방안도 명백한 효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분노’가 아니라 ‘우려’ 표명에 그치고, 중국도 소극적인 점으로 미뤄 볼때 안보리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 등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분석함.
- 협상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론은 빌 클린턴 행정부 1기부터 세를 얻기 시작했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자극해 부시 집권 8년동안 1-2기이던 북한의 핵무기는 7-8기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대북 직접 대화 가능성에 매달려 왔지만 북한은 지난 4월 오바마가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한 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비난을 계속해 왔다고 타임은 덧붙였다.



● <北핵실험> 빅터 차 “새 체제안전보장 노림수”(5/26)

-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25일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실시 배경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체제안전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실험을 강행했을 수 있다”고 진단함. 지난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전담 연구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된 차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김정일 혹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잠재적 불안정 요인이 있는 개혁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동안 자신들의 체제를 지지하겠다는 미국 측의 확약을 필요로 했을 수 있다”고 지적함. 차 교수는 “이는 지난 2005년 ‘북한을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체제안전보장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말함.
- 또 차 교수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핵 근축협상을 벌이겠다는 생각에서 핵실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밝힘. 그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상적인 협상 결과는 비군사적 목적의 핵에너지 요소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적 사찰을 받지 않는 일부 핵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이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건강이상설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 가족과 강성 충성파들이 점진적으로 후계구도를 잡아가는 리더십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함.
- 차 교수는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과 관련, “미국은 고위급 관리를 동북아에 보내 미국 핵우산 아래서의 안보공약을 (동맹국에)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봄. 이와 함께 차 교수는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구상(PSI)에 유엔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결의 1718호에 나와있는 대북 제재의 전면이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함.

● <北핵실험> 그린 “핵보유국 지위 획득 일환”(5/26)

-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잘 짜여진 계획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함.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으로 일했던 그린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 행정부가 최근 수년간 온건한 대북노선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강한 제재에 나설 수 없고, 중국도 원조를 중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그린 연구원은 또 이번 핵실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대내외에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 등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함. 그는 또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늘 그래왔듯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불행하게도 북한은 최근 2년간 나쁜 교훈을 배웠다”며 “그것은 북한이 실험을 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로 위협을 가하고, 결국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 준다는 교훈”이라고 말해 미국 행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함.

● 오바마 “국제사회 북핵 대응조치해야”(5/2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히고 이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발언에서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은 국제법을 어긴 것은 물론 (비핵화를 하겠다는) 과거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맞서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자신들의 고립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자초했음이 밤사이에 자명해 졌다”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함. 이어 그는 “우리는 우리의 우방 및 동맹과 더불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맞서는데 공조할 것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국제 비확산 규범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북한은 위협과 불법 무기를 통해서(자체) 안보와 (국제적) 존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국은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北 핵실험> 플루토늄·핵무기 재고량 감소(5/26)

- 북한의 2번째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지만, 북한이 추출해냈을 무기급 플루토늄이나 만들어냈을 핵무기의 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의미하기도 함. 파키스탄 등의 경우에서 보듯 핵무기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한 차례 대규모 핵실험에 뒤이어 작은 규모의 핵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해 소형화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임. 따라서 북한도 앞으로 핵무기의 소형화를 위해 몇차례 더 크고 작은 핵실험을 벌일 수 있음.
-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포위망 때문에 이미 무기화했거나 무기화를 기다리고 있는 플루토늄 양을 단



기간에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기존 재고량으로 핵무력을 증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또 하나의 경로인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임. 북한은 또 핵무기의 전력화를 위해선 계속 핵실험만 할 수도 없는 형편임. 북한의 현재 핵능력에 대해선 각국의 정부 안팎의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해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핵무기 6-8개를 제조할 수 있는 40kg 안팎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거나 그것으로 그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게 한·미군당국의 추정치임.

- 북한이 미국에 신고한 플루토늄 26kg에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4kg을 포함시키면 대략 이 추정치에 근접함. 여기에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밝힌 대로 영변 5MW급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면 7~8kg 정도를 추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대부분 북한의 원자로와 유사한 원자로의 가동 상태와 일반적 수준의 재처리와 핵무기 제조기술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또 북한이 1,2차 핵실험에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나 더 핵실험을 할 수 있고, 몇개를 핵무기로 보유하려 할지 등은 매우 불투명함.
-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 6kg의 플루토늄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기폭장치 제조 능력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플루토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협력팀장은 “북한의 핵무기에는 5~7kg 정도의 플루토늄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핵실험에도 이와 비슷한 양의 플루토늄이 사용될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최대 7~8회 정도의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함.
- “하지만 북한의 기술력에 따라 플루토늄 사용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몇 차례나 더 핵실험이 가능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모든 기관의 발표는 추정에 근거해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이 팀장은 지적하고 “북한이 앞으로 핵탄두 소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소규모 핵실험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게다가 북한이 앞으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만큼 핵실험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돼 마냥 핵실험을 이어가기보다는 외부세계에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처럼 비치며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결합한 핵미사일 능력의 과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北핵실험> 박한식 “北 6자회담 복귀 **않**할것”(5/25)

-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는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대외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가 부시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대북정책을 취하는데 대해 그런 식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함. 북한문제 전문가인 박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크게 대내적, 대외적 두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하는 선군정치 본보기를 국민들에게 과시해 체제 정통성을 강화하고 국위를 선양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박 교수는 이어 “북한으로서는 체제안보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들어선 오바마 정부가 이에 관한 대답을 주지않고,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의지도 별로 없다고 보고 행동에 나서는데는 것같다”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배경에는 미국내 군사산업을 배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도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든다”고 분석함. 그는 특히 “미국과 한국은 계속 6자회담을 거론하는데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북한은 절대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은 애초부터 북한이 선호하는 회담의 틀이 아니었고, 부시 정권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적 틀”이라고 지적함.
- 그는 “특히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더이상 햇볕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더이상 6자회담을 통해 얻을 득이 별로 없다”면서 6자회담의 틀이 폐기될 가능성을 시사함. 박 교수는 “향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 해결, 집단안보문제, 대북지원 등 6자회담의 목적을 살리면서 형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4자회담과 같은 다른 종류의 다자회담이 타협책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박 교수는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핵실험을 김정일 후계체제와 연관시켜 분석하는데 대해 “핵개발은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하는 선군정치의 산물인 만큼 이를 강조할 의도는 있을수 있겠지만 후계체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문제와 관련, “핵실험 문제와는 별도의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며, 북한이 이 문제를 북미관계와 연결시켜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6월 4일에 재판이 열리면 중형을 언도한 뒤 석방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함.

● <北핵실험> 中 “단계적 제재 검토”(5/25)

- 중국 정부는 25일 북한이 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단계적으로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



집.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 외교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중국의 불만과 분노의 수위가 짐작된다고 논평함. 중국 고위층은 북한으로부터 이번 핵실험에 앞서 사전 통보를 받고 강력히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양 당국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분노와 함께 안보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실감했을 것이란 관측임.

- 중국은 이에 따라 이번 핵실험 직후 최고위층 주재로 외교부, 당 대외연락부, 당 중앙외사관공실 등 관련 기관들이 당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회의를 열고 단계적인 제재에 착수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했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음.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 이뤄 단계적인 대응방안으로는 ▲강경한 내용의 성명 ▲대북 특사 파견과 항의 전달 ▲국제제재 동참에 이어 마지막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됨.
- 중국은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본격적인 핵개발이 자국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에 핵 도미노를 불리오기 때문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긴박한 입장에 처해 있어 이번에 북한에 단단히 쐐기를 박으려 한다는 것이 제재 검토의 이유임. 베이징 당국은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분노를 표시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동참함. 그러나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않았음.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감싸 안고 가려는 정책적 배려 때문이라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임.
- 북한이 이런 중국의 입장을 이용, 강경 일변도로 치달아 중국의 대북 유화론자들은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분석이 이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들이 서방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님. 중국은 북한이 외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육로이며 현재 북-중간에는 철도 몇 개와 비공식으로 15개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국경 폐쇄는 엄청난 압력이 됨. 특히 신의주와 마주 보는 단둥(丹東)에는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음. 중국이 송유관 수리를 이유로 2-3주만 송유를 중단해도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크게 곤란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물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안을 천천히 시간에 옮기는 중국 외교의 특성상 대북 압박이 급박하게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베이징 외교가에 확산되고 있음.



● <北핵실험> 러' 외무부 “안보 위협”(5/25)

- 러시아 정부는 25일 북한이 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 역내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북한을 비난함.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규정하면서 “러시아는 이번 핵실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 성명은 또 “이번 핵실험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됐으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며 유감을 표시함.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만이 유일한 위기 해결책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함.

● <北핵실험> 러' 전문가 “미국이 목표”(5/25)

-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레라야 러시아 세계 재단 아시아·아프리카 지역국장은 25일 “이번 북한 2차 핵실험은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함. 톨레라야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행위는 자신의 핵 역량을 과시하려는 것이며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함. 그는 “북한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전 정권과 똑같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이어 “바로는 아니겠지만, 중국엔 북·미 대화가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봄.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그렇듯 북한을 압박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함.
- 또 러시아과학원 산하 극동문제연구소 예브게니 김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때 이미 핵실험이 예고됐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다”며 “결국 미국을 염두에 둔 액션이며 미국과 양자 직접대화도 갈 것”이라고 말함. 특히 그는 “이날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는 무관하다”며 북한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맞춰 고의로 핵실험 날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함.
- 한편, 미하일 마르겔로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외교관계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북한은 엄격한 (유엔) 결의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북한의 핵실험은 모든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쏟아진 외교적 노력이 무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엔과 많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함. 또 국가두마(하원) 외교관계위원회 소속 루슬란 콘드라토프 의원은 “북한은 핵실험 등 강경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국제사회에 물질적



인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 레오니드 슬루츠키 하원 외교관계 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어겼고 국제 사회는 이에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함. 그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역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국제사회 안보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북한은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강경한 결의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고 말함.

● <北핵실험> 中 “핵실험 결사반대”(5/25)

- 중국 정부는 25일 북한이 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 결사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힘.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확산을 저지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함.
- 외교부는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며 6자회담의 궤도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함. 성명은 이어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관련국들이 냉정과 타협의 자세로 대응하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北핵실험> 위력 커..성능개량 주목(5/25)

- 북한이 25일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전격 실시한 핵실험의 위력이 1차 때보다 큰 것으로 관측돼 핵무기 성능개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정보당국과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4.4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 이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 리히터 규모 3.9의 인공지진파에 비해 0.5가 강한 것임. 이 때문에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첩보위성과 통신첩보 수단을 총가동해 길주군 핵실험장의 지형이 일부 변화된 것을 관측한 것으로 알려짐.
-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위에 출석, 답변을 통해 “인공지진파 규모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4.4로 판단하고 미국은 4.7로, 일본은 5.3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4.4 이상은 분명하다”면서 “과거보다 위력 면에서 규모가 크고 먼저(1차 때) 보다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국방부의 한 전문가도 “핵실험 위력이 크면 진동이 크게 나타난다”면서 “지진파가 크다는 것은 결국 폭발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이 장관과 인식을 같이함. 1차 핵실험은 TNT 1kt의 폭발 규모였으나 이번에는 이 보다 폭발위력이 훨씬 크다는 게 이 전문가의 관측임.



-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함. 정보당국은 지진파의 규모가 1차 때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 북한의 핵무기 위력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당국은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당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15kt과 22kt 정도보다 작은 규모인 TNT 1kt의 폭발 규모였기 때문에 실패한 실험으로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에는 폭발 규모로 보아 1차 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실험일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차 때보다 플루토늄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무기 성능이 개량됐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함.
- 이 관계자는 “만약 1차 때와 동일한 양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는데 지진파가 커졌다면 개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기술적인 지표를 받아보지 않는 한 개량 여부나 성공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음. 정보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북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함. 이 때문에 장거리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함.
- 이상희 국방장관도 국방위 답변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운반 수단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데 방점을 뒀음.

● 北, 단거리 미사일 2발 추가 발사(5/25)

- 북한은 25일 오후 5시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됨. 한 정보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무수단리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했다”면서 “기종은 지대공 미사일로 분석된다”고 전함. 동해 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앞서 발사된 1발과 동일한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이날 낮 12시8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무수단리 지역은 이날 핵실험을 강행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핵실험 정보를 탐지하려는 미·일 정찰기의 비행을 경고·저지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음. 앞서 북한은 지난주 함경북도 김책시 연



안 약 130km 해역을 이달 30일까지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예견돼 옴.

● <北 핵실험> 中학자 “MB정부에 대한 의도있어”(5/25)

- 귀쎬강(郭憲綱)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25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귀 연구원은 이날 중국라디오방송(CNR) ‘중국의 소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이유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설명함. 그는 “북한은 4월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자 6자회담에서 탈퇴하고 핵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북한은 당시 했던 약속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 핵실험의 또 다른 배경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살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내면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함. 귀 연구원은 이번 핵실험이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갈수록 많아지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다”면서 “세계에 미칠 영향이나 반응이 상당히 강렬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국제적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각종 형식을 통해 북한을 비난할 것이며 이밖에 일부 국제평화단체나 비정부기구(NGO)들도 북한에 대한 비판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함.
- 스인홍(時殷宏)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이날 중국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충격을 받고 있는 한국 국민이나 정부가 이번 핵실험으로 이중의 충격을 받게 됐다고 말함. 스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과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관련이 있는냐는 질문에 “핵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거했다”면서 “따라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함. 그는 “물론 북한이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때문에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정치적 곤경을 탈피하는데 유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스 교수는 한국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한국과 일본 경제는 이미 금융위기로 인해 막대한 여파를 받고 있어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이번 핵실험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한국경제가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런 경험을 비교적 많이 겪었다”면서 “따라서 한국 경제가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설명함.



● 오바마 “北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5/2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힘.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함.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북한은 직접적이고 무모하게(recklessly) 국제 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런 행동들은 모든 국가의 중대한 근심”이라고 지적함. 그는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이런 도발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함. 그는 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전달 수단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위험은 국제 사회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준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해 왔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향후 유엔 및 6자회담 참가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침을 밝힘.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은 현지시간 25일 새벽에 발표된 것으로 극히 이례적임. 이는 ‘핵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추가 핵실험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됨.

● <北 핵실험> 美 전문가들 “北 세습문제와 관련”(5/25)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전격적인 추가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세습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음. 보수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인해 그가 사망하거나 공식적인 세습이 이뤄지기 전에 핵목표를 달성하려는 욕망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곧바로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협상용이라는 종전과 같은 외피를 던져버리고 아예 사용가능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힘. 그는 “북한은 종전에는 미국과 그 우방들이 북한에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올해 들어 잇따라 도발적 행위를 하는 것은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촉발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함. 또한 그는 “북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온건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국, 한국,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새로운 계임을 하는 것이며, 궁



극적으로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목표를 드러내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도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이 내놓은 성명은 미뤄볼 때 이번 핵 실험은 북한의 후계문제와 관련된 취약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역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후계 세습과정에서 외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수위와 관련, “일단 오바마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
- 그러나 스나이더 소장은 “문제는 이미 상당한 수위까지 올라와 있는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켜나가는 악순환을 끊으면서 추가적인 대북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개선에 노력하겠지만, 결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北 핵실험> 러시아 “폭발력 20킬로톤 달해”(5/25)

-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최고 20킬로톤(kt. 1kt는 TNT 폭약 1천t의 폭발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보도함.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이 통신에 “우리의 감시 시설이 북한 영토 내에서의 지하 핵폭발을 확인했다”며 “2006년 1차 핵실험 장소와 같은 곳에서 이뤄졌으며 이번 핵실험은 20킬로톤에 이르는 폭발력을 보였다”고 말함. 이와 관련, 인테르팍스와 리아 노보시티 통신 등 다른 언론은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이날 오전 4시54분 41초(현지시각)에 기록된 핵 폭발 감시 시스템에 10~20킬로톤에 상응하는 지하 핵실험이 관측됐다고 보도함.
-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당초 4킬로톤의 폭발력을 기대했으나 최대 0.5킬로톤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과 22킬로톤 정도였음.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함.
-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힘. 또 현재 레바논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 핵실험 소식에 대해 “당연히 우려하고 있다”며 “우린 핵실험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함.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지금 시점에서 과잉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당사국들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함. 그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앞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느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 북한이 이날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러시아 측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단지 러시아 측 한 외교 소식통이 “핵실험 이후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어떤 접촉을 가진 바 없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사전 양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임.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현재 러시아 정부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함.

● 美 “北 핵실험 발표, 중대하게 우려”(5/25)

- 미국은 25일 추가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북한 발표와 관련,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대응책을 논의중에 있다고 밝힘.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새벽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주장에 중대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고 말함. 이 당국자는 이어 향후 대응책과 관련,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다음 단계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함.
- 그는 또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핵실험과 일치하는 지진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의 앤디 레인 부대변인은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북한의 발표 직후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동맹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사실로 입증되면 이에 관해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 <北 핵실험> “유엔 안보리 25일 소집”(5/25)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러시아 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보도를 분석 중이라고 밝힘. 이에 앞서 교도(共同)통신은 유엔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할 전망이라며 긴급회의가 이날 중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핵실험> 러시아 ‘우려’ 표명(5/25)

- 러시아 정부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함.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 핵실험 소식은 우려를 낳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며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정보를 자



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 채택 등에 반발해 북핵 6자회담 참여 거부와 핵시설 복귀, 핵실험 강행 등을 선언한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

● 中 “냉정대처 필요..北 비핵화해야”(5/25)

- 중국은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또 이번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측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 이후 알려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셈(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중인 유 장관은 이날 오전 하노이 대우 호텔에서 양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함.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으로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으며 심각해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럴 때 일수록 한·중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함.
- 중국은 특히 ‘냉정하게 앞으로의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북한 비핵화 정책이 확고부동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유 장관은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뒤 북한 핵실험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고위 당국자가 전함.

● EU 외교수장 “北 핵실험 매우 우려”(5/25)

- 유럽연합(EU)의 외교장관 격인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대외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함. 발트너 집행위원은 25일 방콕에서 북한 핵실험 보도를 접하고 “아직 (북한 핵실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매우 조심스럽지만,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이어 북한의 핵실험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이라며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함.
- 발트너 집행위원은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수행해 최근 방한한 뒤 현재는 태국을 방문 중임. 지난 2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바 있음.



● **日 총리실, 위기관리센터 대책실 설치(5/25)**

- 일본 정부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 총리실 위기관리 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NHK가 전함. NHK는 이날 낮 12시 정규 뉴스 시간에 자막을 통해 북한 측이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전한 뒤 곧바로 긴급 뉴스로 관련 소식을 전함.
- NHK는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앞서 청와대도 이날 오전 함북 길주군에서 진도 4.5 인파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3년 전 10월에 이어 처음으로, 한국 당국도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함. 일본 기상청도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북한 북부에서 진도 5 정도의 지진파를 관측했다”고 밝힘.

나. 미·북 관계

● **美국방 “오바마 대북관 순진하지 않아”(5/31)**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나 핵물질의 수출을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음. 게이츠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이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발언과 관련해 인내심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호전적인 정책을 폐기하려는 전제정권들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도 희망을 갖고 있지만 순진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음.
- 또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 수출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 아시아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파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그는 이어 북한은 “가난한 국제사회의 부랑아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전환을 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美상원, 내달 9,10일께 북한 청문회<RFA>(5/30)**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 북핵 6자회담의 미래 등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이후 강경한 내용의 외교부 성명을 내고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면서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한 지 4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중국 측의 불만과 불쾌감의 정도를 드러내 주고 있음.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지난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면서 “북한에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 北, 中 접경지역 통제 대폭 강화(5/28)

-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 실험에 나선 북한이 최근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28일 대북 소식통 및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접경지역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 시작, 25일 2차 핵 실험을 전후해 통제를 더욱 강화함. 이로 인해 인편을 통한 북한 송금길이 막혀 북·중 무역이 위축되고 있으며 탈북을 위해 접경지역 군인들에게 건네는 ‘탈북비’도 크게 오름.
- 상당수 북한 수출기업들은 자금 흐름이 노출될 수 있는데다 당국에 의해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은행 대신 인편을 통한 수금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이 때문에 중국 수입상들은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을 오가는 화물차 기사나 도강증(渡江證) 소지자들을 통해 결제 대금을 송금해 왔음. 이런 관행에 대해 북한 당국도 사실상 묵인, 압록강변에 위치한 북한 세관 상담실에서 자유롭게 대금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통제가 강화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이나 도강증 소지자들이 돈 심부름을 극히 꺼리고 있음.
- 한 대북 무역상은 “인편 송금 방식으로 수만달러씩 북한에 보내곤 했는데 줄곧 심부름을 해주던 사람이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고 손사래질을 해 애를 먹었다”며 “최근 신의주에서 돈 심부름을 하던 사람들이 적발돼 ‘다쳤다’는 얘기가 돌면서 심부름꾼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함. 그는 “돈이 안돌면서 북한과의 무역도 크게 위축돼 많을 때는 하루 100여 대의 차량이 오갔던 단둥만 하더라도 최근 10여 대만 운행되고 있다”고 전함.
- 탈북자나 한국의 친지들이 은밀하게 보내는 송금은 터더욱 어려워져 20%의 수수료를 건네는데도 돈을 전달해주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탈북자 발생 초기 300-500위안이었던 ‘탈북비’는 접경지역 단속이 강화되면서 올해 초 5천-6천위안으로 올랐으며 최근에는 1만위안으로 꺾충 뛰었다고 대북 무역상들은 전함. 이들에 따르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이 막히면서 북한 돈 가치도 폭락, 불과 한 달여 만에 1달러 당 3천200원에서 4천원으로 치솟았음.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 연변(延邊) 조선족자치



주 투먼(圖們) 일대 접경지역에는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감시 카메라 수십 대가 북한 측에 의해 새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짐.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군부 강경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느슨했던 접경지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삼엄해지면서 무역은 물론 인적 교류도 상당히 위축됐다”며 “내부 동요를 차단,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함.

라. 일·북 관계

● 日, 북한 자금세탁 차단 강화(5/27)

- 일본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로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자금 동결·몰수와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7일 전함.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을 결정한 만큼 북한의 테러 자금과 관련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드러날 경우 신속하게 자산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의 핵심임.
-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외환거래법에 따라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을 지정, 이들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금이전 방지 조치를 마련함.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테러 대책법과 관련, 테러법에 의해 자금 축적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범죄’라면서 협력자들의 간접적인 자금 제공·수집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애매하다는 등의 이유로 40개항에 걸쳐 시정권고를 함.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FATF로부터 제명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FATF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할 방침이었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테러 자금 대책 강화안을 추가 제재안에 포함키로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함.
- 동시에 일본 정부는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물론, 북한의 1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이미 전면 금지됐고, 수출액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압박 효과는 거의 없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의연히 대응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해 이런 방안을 채택할 방침임. 대신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추가 제재안의 시행 시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새 대북결의안 논의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마. 기타

● 주한러대사 “대북 군사옵션 반대”(5/29)

- 글레브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9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군사적 옵션은 반대한다”며 “대북 제재가 북한을 사실상 고립시켜 국제사회가 그나마 갖고 있는 대북 지렛대를 상실해 북한이 더 군사 모험주의적으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이바센초프 대사는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동북아 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날카롭게 공개비난하고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처를 주도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끈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보리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위치는 아니지만 “러시아로서는 제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제재 수준은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 이어 그는 북한이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이 교착된 것도 북한 탓만 할 수 없는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각자의 의무와 경제보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비해 브라이언 맥피터스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북한의 핵실험후 화두는 대북 ‘압력’으로, 6자회담 참가국이 단합해 하든지, 양자간 하든지 그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유엔을 통한 제재든, 양자간 제재든 서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대내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그는 덧붙여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참여 여부가 관건임을 시사했다.

● 러시아, 북한 대사 소환해 유감 표명(5/28)

- 러시아 외무부는 27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핵실험 실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사 소환 사실을 전하면서 김 대사에게 역내 안보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에 북한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성명은 러시아 외무부가 김 대사에게 이번 2차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러시아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다시한 번 전달했다고 밝힘.



● “북-러 정부간 위원회 연기” <이타르타스> (5/26)

- 북한이 25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북한-러시아 정부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위원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러시아 지역개발부의 한 소식통이 26일 전함. 이 소식통은 오는 28~29일 예정됐던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장관의 평양 방문이 “기술적인 문제로 미뤄졌다”며 “날짜는 추후 다시 정해질 것”이라고 말함. 바사르긴 장관은 북-러 정부간 위원회 공동의장임.

● 브라질, 北주재 대사관 업무 개시 연기(5/26)

- 브라질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평양 주재 대사관의 공식업무 개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EFE 통신이 25일 보도함.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이날 이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곧 북한으로 부임할 예정이던 아르날도 카힐료 초대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입국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함.
- 브라질 외무부 대변인은 카힐료 대사가 현재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으며, 이번 주 중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전함.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서 쿠바에 이어 두 번째, 남미 지역에서는 첫 대북 수교국으로, 2001년 3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함. 북한은 2005년 브라질리아에 대사관을 개설했으며,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 작업을 벌여옴. 카힐료 대사는 지난 3월 초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부터 평양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음.
- 앞서 아모링 장관은 지난 11일 브라질리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당시 회담에서 아모링 장관과 박 외무상은 양자 간 통상 확대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개발 계획, 인권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국방 “北도발 단호대처” (5/30)

-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음. 또 미국은 이를 위해 핵 ‘확장억제력’ 제공 등 유사시



한반도 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

-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양자회담에서 열어 북한의 핵실험 등 일련의 도발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숙의한 뒤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 이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하면서 “대(對) 한반도 방위공약과 유사시 증원전력 제공,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확장억제력 제공 등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이츠 장관은 확장억제력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4가지 기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천명했음.
-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만큼 확장돼 있으며, 또 확고하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음. 두 장관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진행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간다는 기존의 합의사항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라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음.
-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한다’는 말은 북한의 군사적 상황에 따라 전작권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2년 전환을 전제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확장억제력 제공 등 그 위협을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관리하는 제반대책을 강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한-미, 6월 정상회담서 ‘미래비전’ 채택”(5/29)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 미국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원칙과 지향점이 제시될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짐. 외교 소식통은 29일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안다”며 “한·미동맹을 글로벌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게 요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를 위해 현재 양국이 실무 차원에서 문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이 당국자는 “큰 틀에서 보면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합의했던 ‘21세기 전략동맹’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은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치적 선언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리 길지 않은 분량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부 관계자들의 전언임.

- 외교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미래비전 선언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등의 성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현안까지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함.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이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처음으로 문서화된 형태로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 <北핵실험> 美 ‘확장억제’개념 주목(5/28)

-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핵 억제력’으로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의 개념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은 ‘핵우산’(nuclear umbrella)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으로 표현됨. 핵우산이 포괄적이고 정치적 개념이라면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보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개념임. 일부 정치권에서 핵우산을 구체화하도록 미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우산과 확장억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임.
-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확장억제 개념 자체가 핵우산을 군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는 설명인 것임. 미국은 1978년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1992년 모두 철수한 뒤 ‘우산’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함. 이후 핵우산 개념은 2005년 SCM 공동성명 때까지 명시되었지만 2006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확장억제’로 바뀌었음. 국방부는 당시 SCM 실무협약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더욱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요구해 이 개념이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임.
- 확장억제 개념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보복 응징타격을 가한다는 개념임. 즉 미국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으로 응징한다는 것임. 미국은 2002년 NPR(핵계획검토보고)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 수단으로 기존 3대 전략무기에다 다양화된 타격수단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념을 수정함.
- 즉 지하 군사시설이나 핵과 생화학무기 시설을 실제 핵무기로 응징 보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초정밀타격체계를 확장억제 수단



으로 추가했다는 것임. 특히 적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 본토나 동맹국의 지상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활동, WMD 사용 징후시 경보, 탐지, 방사능 오염제거까지의 수단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임.

- 한·미간 합의에 의해 SCM 공동성명에 명시한 확장억제는 이처럼 변화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임. 한·미 양국은 2006년 SCM에서 확장억제 개념을 공동성명에 반영기로 합의한 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장억제 개념을 구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정보감시태세 ‘워치콘’ 격상(5/28)

-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8일 오전 7시15분부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등급 격상함.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도발위험이 심각한 상황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됨. 워치콘 2단계 상향 조정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15일 이후 2년7개월 만임.
-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워치콘 격상 사실을 발표한 뒤 “워치콘이 격상되면 감시자산과 항공정찰 등의 정보 수집자산, 분석요원 등을 증가 투입해 대북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함. 원 대변인은 “워치콘 격상에 따른 세부적인 군사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한·미는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대북 감시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우리 군은 북한이 1982년 2월부터 1개월여간 II-28 폭격기를 전진 배치하고 훈련했을 때와 1996년 4월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를 기도했을 때,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그리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인 2006년 10월15일 워치콘 2를 발령함. 이번에 다섯 번째인 워치콘 상향조정과 관련, 원 대변인은 “한·미 정보·작전 관계자들이 판단하고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현재의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 예상되는 위협을 모두 판단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함.
- 합동참모본부 박성우 공보실장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판문점대표부가 서해 5개 섬의 선박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등 최근 북한동향을 평가할 때 좀 더 동향을 세밀히 감시할 필요성이 있어 워치콘을 격상했다”고 말함.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은 U-2 고공전략정찰기와 RF-4 정찰기 등의 대북정찰 횟수를 늘리고, 정보 분석요원을 대거 증강해 북한의 도발 징후 파악과 분석 작업에 돌입함. 5단계로 발령되는 워치콘은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긴박해지면 점차 3, 2, 1등급으로 단계가 올



라간다. 그러나 군은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은 평소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음.

● <PSI참여> 오바마, '제도화' 구상은 (5/26)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느슨한 형태의 국제협력체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화, 국제 규범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옴.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순방 기간인 지난 4월 초 '핵없는 세상'을 주제로 행한 '프라하 연설'에서 PSI의 제도화(institutionalize)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회의에서도 PSI를 영속적인 국제제도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역설함.
-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제도화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어 PSI 제도화는 현 단계에서는 일단 선언적 차원의 구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임. PSI가 전통적인 의미의 다자협력 틀에서 요구되는 조약이나 헌장은 물론 사무국,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 등을 갖추지 못한 만큼 차제에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게 오바마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이고,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 정도만 나오고 있음.
- 부시 행정부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핵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PSI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 국가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PSI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 5월 이른바 '네오콘'의 주장에 따라 도입됨. 당시 부시 대통령의 폴란드 '크라코프 선언'을 계기로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이 발의해 출범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체로 발전함. 하지만 공식화된 국제규범이 없는 만큼 '임의활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비판론을 잠재우려고 차제에 PSI를 영속적인 국제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느슨한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차단 사례가 보고되는 등 나름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 PSI를 제도화할 때, 자칫 PSI가 추구하는 WMD 차단 목적을 달성하는데 거추장스러운 장치를 다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예를 들어 일부 PSI 참여국은 구속력을 띤 조약이나 헌장 형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부담을 느껴 탈퇴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과정 등이 명문화돼 '레드 테이프'가 늘어날 때는 WMD 및 운반수단의 차단·저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임.
- 따라서 PSI의 제도화도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비공식적인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인도, 파키스탄 등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양측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 남북한 대치국면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우발적인 총격 사태 발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 선 주임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우호관계”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대다수 국가나 인민의 이익을 위배하고 세계 평화라는 목표를 어긴다면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함. 그는 “중국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다”면서 “핵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중국과 세계 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이며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중국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표시했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오바마 “한국 PSI 참여 환영”(5/2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PSI 전면참여 발표에 ‘감사(appreciation)’의 뜻을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는 한국 방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활동을 억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한국과 함께 모색하고 지지한다는 데 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PSI 전면가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회의에서 모든 국가들에 대해 PSI 가입을 촉구했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전함.
-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안보에 대량과괴무기 확산보다 시급하고 극단적인 위협이 없다”면서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PSI와 같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함.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유럽순방 기간 프라하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PSI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한국의 PSI 참여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미국은 지난 2003년 PSI 창설을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의 전면 참여를 은근히 기대해 왔지만, 진보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놓고 전면참여를 요청하지는 않았음. PSI는 핵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PSI참여 국가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북



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참여한다면 WMD 확산 저지를 위한 중요한 ‘초동 거점’을 확보하는 셈임.

나. 한·중 관계

● 中国방부장 “北, 상황악화 행동 안돼”(5/26)

- 한국과 중국 국방부 장관은 26일 제2차 핵실험 및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조성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긴장조성 행위에 대해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행위가 그들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전함.
- 특히 량 부장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긴장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견결히(아주 강하게) 반대하며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함.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로써, 이는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이자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원칙을 설명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보유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함. 이 장관은 또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중국 측의 단속과 탈북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함.
- 양 장관은 한·중 군사관계가 인사, 부대, 학술교류, 함정 상호방문 등 초보적 군사교류 단계에서 수색구조훈련(SAREX) 등 점차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작년 5월 양국 정상이 선언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국방전략대화를 개설,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한·미 간에는 2개월마다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안보정책구상(SPI)이라는 회의체가 있는데, 한·중도 이런 전략대화체를 만들어 북한과 동북아 문제 등 현안을 주기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이 장관이 제의했고 중국이 호응했다”며 “향후 실무급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함.
- 또 작년 11월 개통된 해·공군 작전부대 간 직통망 운용을 통해 긴급연락체계 구축은 물론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음을 평가



하는 한편 상호연락체제 강화, 학술단체 간 교류확대 등 양국 간 교류협력과 대화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함. 양 장관은 국제평화유지활동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퇴치작전 등 양국의 공동 안보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필요성에 공감함.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2007년 4월 이후 2년1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국방부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에 따라 국방협력관계 발전에도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다. 한·일 관계

● “한·일, 아시아 군사정세 훼손 우려” <CSM> (5/29)

- 북한 핵실험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어정쩡한 반응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28일 미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
-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부드러워선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음. 또 2차대전으로 이어졌던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재현되서는 안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말과 행동으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방위공약을 재확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위협적 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무역이 아닌 말과 외교로 적을 설득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소프트 파워를 선호한다.’ 실제로 북한이 5월25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비슷한 규모의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도 그는 고작 미국은 “이런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우방 및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쳤음.
-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말과 행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 또는 어쩌면 중국과 대결하게 될 경우 그들이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고 느끼게 하는 걱정스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CSM은 지적했음.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신뢰할만한 방위공약 재보장을 통해 이런 인식을 신속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 한·일 “北핵실험, 안보리서 대응” (5/25)

- 한국과 일본 양국은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셈(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하노이 대우 호텔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뒤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 이같이 말함.
- 유 장관과 나카소네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의 중대성



을 감안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고위 당국자가 전함. 유 장관은 나카소네 외무상에 이어 곧바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들어가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함. 유 장관은 “일본은 물론 이번 회의에 참석중인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함.

라. 미·중 관계

● 펠로시, 中인권비난 발언 자제(5/28)

- 중국의 인권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 방문중 인권 비난성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음. 중국 신화통신은 지구온난화 관련 포럼 참석차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펠로시 의장이 2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와 면담했다고 보도함.
-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후 주석 역시 지난 30년 동안 중미관계가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함. 펠로시 의장은 또 28일 칭화(淸華)대에서 실시한 연설을 통해 환경 안전이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일을 일주일 앞두고 중국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강도높게 비난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었음. 실제로 중국인 100여명이 27일 오후 3시께 베이징 시내 국무원 신문관공실 건물 앞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함.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거부해야 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인도를 방문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도 함. 특히 그녀는 지난 1991년 톈안먼광장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숨진 이들을 위해’라는 피켓을 들고 톈안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함.
- 중국 전문가들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이번 주말 방중하는 등 미국의 거물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변화된 위상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함. 이들은 또 “펠로시 의장도 이번 방중기간 인권이란 단어를 두 차례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것도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론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중국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마. 미·일 관계

● 美 국무 副장관, 싱가포르·일본 방문(5/29)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와 일본을 잇따라 방문,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임.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국무부 대표단을 이끌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대화인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며, 싱가포르 및 다른 참가국 관리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28일 밝힘. '샹그릴라 대화'는 한국, 미국,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 국방장관들이 모여 역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미국에서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참석하게 됨.
- 이번 회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참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외곽활동 등을 위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동행하는 것으로 보임.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5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일본을 방문, 일본 외무성 관리들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미·일간 공동대응 방안에 관해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임.

바. 미·러 관계

● 러, 화학무기 폐기 공장 완공(5/28)

- 옛 소련 시절 만들어진 화학무기들을 폐기처분하기 위한 대규모 공장시설이 29일 공식 완공돼 신경가스 등 치명적 무기들의 폐기 작업이 본격화됨. 모스크바 동쪽 1천600km 서시베리아 슈후헤 지역에 들어 선 조그만 마을 크기의 이 폐기시설은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약 10억 달러를 제공해 건설된 것으로 냉전 이후 군축분야에서 이룩된 미국과 러시아 간 획기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 슈후헤에 위치한 옛 소련 화학무기고에는 약 200만개의 신경가스탄이 저장돼있으며 만약 인구밀집 지역에 폭발할 경우 한개만으로도 수천명의 인명을 앗아갈 수있음. 또 크기는 소형이어서 작은 손가방 속에 숨겨 운반할 수 있음. 따라서 소련 붕괴 이후 이곳 화학무기 처리는 최고의 안전우려 사안이었음.
- 리처드 루저 미 상원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폐기공장 건설이 '군축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함. 미국은 지난 1992년 '협력위협감축' 프로그램(CTR)을 마련해 옛 소련의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남은 무기의 안전저장을 위해 자금을 제공해왔으며 루저 의원과 샘 년 의원등이 이 프로그램의 주안자였음.
- 러시아는 국제화학무기협약 참여국으로서 군사전용 화학물질인 1급 무기들을 폐기처분해야 함. 러시아 군수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해당 화학무기 보유량의 약 30%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슈후헤 지역에 대규모 폐기시설이 들어섬으로서 러시아 당



국의 화학무기 폐기 작업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러시아 관리들은 새 폐기시설 완공으로 러시아가 조약상 의무시한인 2012년까지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화학무기 폐기공장 준공은 시기적으로도 미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대신할 새로운 후속협정을 모색하는 상징적인 시기에 이뤄짐. 슈후헤 지역에서 폐기처리될 화학무기는 사린과 VX를 포함해 약 5천460 메트릭톤(MT) 분량의 신경가스로 러시아가 처분해야 할 전체 화학무기의 14%에 해당하는 것임.
- 이 공장의 초기 처리 규모는 연 850 MT이나 금년말 두번째 공장이 완공되면 처리량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 화학무기들은 밀봉된 포탄에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꺼낸 후 중화작용을 거쳐 역청소금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짐. 이 덩어리들은 드럼통에 넣어져 콘크리트 병커 속에 보관됨.

사. 기타

● <한-아세안 협력 동반자 관계 공고화 계기>(5/29)

- 오는 6월 1~2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간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新)아시아외교'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특별정상회의 성과가 주목됨.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아시아에서 지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위상을 차지하고자 부심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임.
-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아세안은 중국(1천683억달러)과 유럽연합(EU.984억달러)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대상지역으로 작년 말 현재 교역규모가 902억달러(수출 493억달러, 수입 409억달러, 무역수지 84억달러 흑자)에 달함. 또 한국의 두번째 해외투자대상(투자규모 58억달러)이고 2대 해외건설시장(건설수주액 91억달러)임.
-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천연가스, 원유, 석탄 등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고루 갖추고 있어 G-10(세계 경제 10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으로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포괄적 협력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음.
- 정치·외교적으로도 아세안은 한국에 중요한 대상임. 10개 회원국 모두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는 점은 국제무대에서 이들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더욱이



아세안은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고 있기도 함.

- 아세안은 아·태지역 유일의 정부간 다자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창설(1993년)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3 정상회의(1997년), 동아시아정상회의(2005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1996년), 아·태경제협력체(APEC.1993년) 정상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때문에 한국이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선 미·일·중·러 등 주변 4강 외교 및 한·중·일 3국간 협력 외교와 함께 대(對)아세안 외교를 중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신 아시아외교’를 표방하고 나선 것도 이를 반영한 결과임. ‘신아시아외교’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지도적 위치를 굳히고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아 간다는 것. 정부 당국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데다가 최근 들어 금융위기·기후변화·개발협력 등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한국이 ‘신아시아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함.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아시아 외교는 우리의 이웃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번영과 협력관계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베트남 총리 “한반도 문제 대화해결 바람직”(5/29)

- 베트남은 최근 북한의 두번째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 상황을 깊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확인함. 응웬 쩌우 쩌우 베트남 총리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8일 한국으로 출발하기 앞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밝힘.
- 쩌우 총리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한 ‘신아시아외교구상’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 등 한국 지도자들과 양국의 협력관계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력 자원 및 법률체계 개선, 투자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함.
- 쩌우 총리는 “2002년 첫 방한 때 한국이 이룩한 경이로운 경제성장에 고무됐다”면서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양국 기업에 서로 이익이 됐을 뿐 아니라 베트남 국가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함. 그는 또 문화·역사적 동질성이 많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문화 교류와 협력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한류의 인기는 대단하다면서, 양 국민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쌍방교류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중 총리는 올해 안으로 한국에 베트남 문화센터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베트남의 경제상황에 대해 중 총리는 “지난해에도 6.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한 뒤 “이런 성공에도 베트남은 낮은 경쟁력과 작은 경제 규모라는 기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음.

● 中 “대만 민진당 인사들 본토 방문 환영”(5/28)

-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대만 야당인 민진당 인사들의 중국 본토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힘. 양이(楊毅)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관공실 대변인은 27일 “중국은 민진당 당원들의 본토 방문을 환영하며 중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함. 양 대변인은 이어 “만약 민진당이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전환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임.
- 그의 이날 발언은 민진당 소속인 천취(陳菊) 대만 가오슝(高雄) 시장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 직후 나온 것임. 장관화 중국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부소장은 “천취 시장의 중국 방문은 기념비적인 것”이라면서 “이는 민진당 일부 인사들이 대륙정책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 장 부소장은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진당도 양안교류가 늘어나고 교류의 수혜자들이 많아지면서 양안 대화와 교류를 거부하는 것은 민심 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양 대변인은 대만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국이 5월부터 9월 사이에 모두 7~9개의 상품구매단을 대만에 보낼 것이라고 밝힘. 그는 “섬유, 가전제품, 광산산업 단체들이 조직한 상품구매단이 오는 31일 대만을 방문할 것이며 중국비디오산업협회도 다음달 1일 중국 TV 연출자들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22억달러 규모의 상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함. 양 대변인은 또 “6월에는 차와 과일 관련 단체들이 대만 중남부지역 농산품시장을 시찰하고 대만 기업들과 상호 협력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중국공급 마케팅협력협회도 오는 9월 중국 11개성과 도시, 업계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우리는 양안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베트남, ODA 체결액 15억달러(5/28)

- 올들어 지금까지 베트남이 공여국들과 체결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5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국영통신(VNA)은 28일 계획투자부(MPI) 성명을 인용해 올들어 지난 5개월여 동안 베트남에 대한 ODA 제공 계약 체결액은 차관 14억5천만 달러와 무상원조 2천만 달러 등 모두 14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성명은 또 같은 기간 대출 6억4천900만 달러와 무상지원 7천100달러 등 모두 7억2천만 달러의 ODA가 집행됐다고 밝혔으나 공여국별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VNA는 전함. 앞서 지난해 12월 개최된 세계은행의 베트남 자문단 회의에서는 올해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3천900만 달러 축소할 50억1천만 달러 확정함.
- 한편 응웬 썬 중 베트남 총리는 27일 세계은행의 신임 지역 책임자인 빅토리아 크와크와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정부는 ODA 지원금을 인프라 건설, 에너지 개발, 인적자원 훈련 및 보건사업 등 사회-경제발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함.
- 이에 대해 크와크와 국장은 세계은행이 2009 예산연도에 베트남에 13억~15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크와크와 국장은 또 앞으로 3년 동안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 30억~35억 달러를 차입해 베트남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훈센 총리 “한국과 외교관계에 자부심”(5/28)

-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시킨 것은 나의 최대 업적 중 하나”라며 “다음달 1~2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훈센 총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3일 프놈펜의 총리관저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캄보디아와 한국이 외교관계를 재수립한 것에 모든 캄보디아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함.
- 그는 이어 수년간 각국의 노력 끝에 1997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을 떠올리며 “만약 재수교하지 못했다면 제주도 정상회의에서도 캄보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아세안 국가만 참여해 ‘부족한’ 행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함. 한국과 캄보디아는 1970년 국교를 수립했지만 5년 뒤 캄보디아에 크메르루주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단절됨. 훈센 총리는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계기로 한국과도 북한과 대등한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을 의식한 반대의 목소리에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함.
- 훈센 총리는 “수교한지 불과 12년 만에 한국은 투자, 관광, 문화교



- 류, 직업 교육, IT 분야, 건축, 금융, 항공 등 캄보디아 내 8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12년간 한국과의 관계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반대층에서 많은 비판을 했을 테지만 그 당시 반대한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지지한다”고 소개함.
-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그는 “아세안 10개국이 한국에서 정상회담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번 특별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훈센 총리는 특히 한국이 한국전쟁 후에 비약적 발전을 거두었듯이 캄보디아도 내전 후의 상처를 씻고 경제발전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난 등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함.
 - 그는 북한 핵문제에 언급, “북한과의 외교 문제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문제로, 북한과 외교할 때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전세계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회담을 거듭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 “아세안을 통해 북한 경제 근대화하자”(5/29)

- 북한의 경제 근대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6자회담 구도보다는 ‘아세안+3’과 같이 아세안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다른 관련국들이 가세하는 ‘아세안+ x’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교수가 29일 주장함. 프랭크 교수는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동북아 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의 발제문에서 “지난 60년간 북한의 국제 경제협력 사례들을 살펴 보면 북한은 주로 작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나라들과 다자적이고도 공식적 틀 안에서 관계를 잘 형성해 왔다”며 이같이 말함.
- 이에 비해 6자회담은 “대결적 협력 구도”로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한데다가 미·일·중·러 등과 같이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덩치가 큰 나라들이거나 경제적으로 북한의 34배 규모인 한국까지 포함된 탓에 북한이 희망하는 이상적 구도에 맞지 않다는 것. 그 대안으로 프랭크 교수는 일단 아세안과 한·중·일이 엮인 ‘아세안+3’과 같은 형태를 제시하면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크기도 작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긴밀하며 권위주의적이고 다자적이며 공식적인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특징들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아세안은 회원국간 내정간섭을 배제한 느슨한 협의체로서 북한의 내정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북한과의 교류에 강점이며, 실제로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들이 포함돼 있고 과거 수년간 북한과 아세안의 공식적



관계가 좋았다고 프랭크 교수는 지적함. 그는 “북한과 한·중·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량은 2006년 북한 전체 무역량의 83%에 달했다”고 상기시키고, ‘아세안+x’ 구도는 최근 남북경협에 따른 ‘개방 후유증’에 대처하면서도 보수적인 북한경제 운용체계에 ‘개혁’을 증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그는 아세안+x 구도를 통한 대북 지원 체제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제시하고 “독일이 EU 예산의 주요 부담자로서 사실상 주변국 경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분배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더라도 그 분배는 아세안 사무국이나 새로 설립한 사무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면 한·일 두 나라의 대내 정치적 거부감도 줄이고 동시에 피지원국인 북한의 자존감도 살릴 수 있다고 프랭크 교수는 제안함.
- 그는 “아세안으로서도 중국 시장에 관심이 많고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일·중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대북협력 구도를 선호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 구도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할지, 또 지역내 영향력 축소를 우려할 미국이 좌시할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잘만 되면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통합 구도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1] <이명박 정부 출범후 남북관계 일지>(연합뉴스, 5/17)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 일지.

◇2008년

- ▲ 1. 1 = 북한 신년 공동사설 “10.4선언 철저 관철” 강조
- ▲ 2.25 = 신(新)정부 ‘10.4선언 재검토’ 기초속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
- ▲ 3. 3 = 정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 촉구
- ▲ 3. 6 = 북 조평통 대변인, 대북 인권개선 촉구에 “망동”이라고 비난
- ▲ 3.19 = 김하중 통일부 장관, “북핵문제 타결없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 발언
- ▲ 3.24 = 북, 김 장관의 발언에 개성공단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 ▲ 3.26 = 김태영 합참의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 묻자 “핵 장소 타격” 답변
- ▲ 3.28 = 북, 김 합참의장의 청문회 답변을 “선제타격 발언”이라 반발하며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NLL 수역서 남북 충돌 경고
- ▲ 4. 1 = 북 노동신문 논평원,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 처음 거론해 “역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 비난 본격 개시
- ▲ 4. 2 = 국방부, 전화통지문에서 북의 ‘자의적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 중단 촉구
- ▲ 4. 3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남측의 전통문 수용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 취할 것” 경고
북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며 “예상 외의 대응조치 따르게 될 것” 주장
- ▲ 5. 8 =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5.30 = 북,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 ▲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 정부가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 7. 6 = 이 대통령,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준비 돼 있다” 발언



- ▲ 7. 8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 대통령의 발언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촉구
- ▲ 7.11 =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이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등과 함께 6.15 및 10.4선언이행을 북측과 협의할 용의 있다고 밝힘. 남한 정부, 관광객 피격 사망 관련 남측 조사단의 현장조사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 ▲ 7.12 = 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금강산 사건에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현장 조사 거부
- ▲ 7.13 = 북 노동신문, 이 대통령 국정연설 “논할 일고의 가지 없다”고 평가절하
- ▲ 8. 3 =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금강산 관광 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모두 추방” 발표
- ▲ 8. 9 =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북측 책임자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조치 8월 10일부터 실시” 발표
- ▲ 9. 3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여간첩 원정화 사건 “모략극” 주장
- ▲10. 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것이라며 살포 중단 요구
- ▲10. 7 = 북,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10. 9 =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이라고 주장
- ▲10.16 = 북 노동신문 논평원 글,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 지속시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10.28 =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 “빠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 ▲11. 6 = 북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황 점검
- ▲11.12 =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전화 통지. 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와 북한측 대표 철수, 판문점 경우 남북 직통전화 단절 발표
- ▲11.24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 관련 상주인원 및 차량에 대한 선별 추방 통보
- ▲11.27 = 북, 12월1일부터 경의선 및 동해선 출입경 시간대 대폭 축소 등 통보
- ▲11.28 =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운행 마지막 실시 후 잠정 중단
- ▲12. 1 = 북측 군사분계선 육상통행에 대한 엄격 제한·차단조치 실시



- ▲12.17 = 북 국방위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개성공단 방문해 “12.1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이거나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
- ▲12.24 = 북 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에서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이제 어떤 극단적 사태가 또 터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

◇2009년

- ▲ 1. 1 = 북, 신년 공동사실에서 이명박 정부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6.15 및 10.4 선언의 이행 강조
- ▲ 1.17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발표
- ▲ 1.30 = 북 조평통 성명,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
- ▲ 2.20 = 이상희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북이 서해 NLL에서 선제 공격을 해올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고 발언
- ▲ 2.26 = 북 조평통, 이 국방부 장관 발언 비난하며 “그 아성까지도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
- ▲ 2.28 = 북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 통신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조치 경고
- ▲3.9~20 = 북,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걸쳐 육로통행 차단
- ▲ 3.23 = 외교통상부, 정레브리핑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검토 중”
- ▲ 3.30 = 북,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체제 비판 혐의로 체포·조사
- ▲ 3.30 = 북 조평통, “남한 PSI 참여는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단호한 대응조치 취할 것” 발표
- ▲ 4. 5 = 북 ‘광명성2호’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
- ▲ 4.16 =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운영 관련 중대문제 통지하겠다”며 남 당국자 초청
- ▲ 4.18 = 북 총참모부 대변인 “PSI는 선전포고” 거듭 주장
- ▲ 4.19 = 남, PSI 전면참여 발표 연기
- ▲ 4.21 = 남북, 개성공단 사업 관련 당국간 접촉
- ▲ 5. 4 = 북,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5월12일 접촉 제의
- ▲ 5.11 = 정부, 북측의 5월12일 접촉 제의에 15일 회담 개최 및 유 씨 문제 의제 포함 의사 전달

